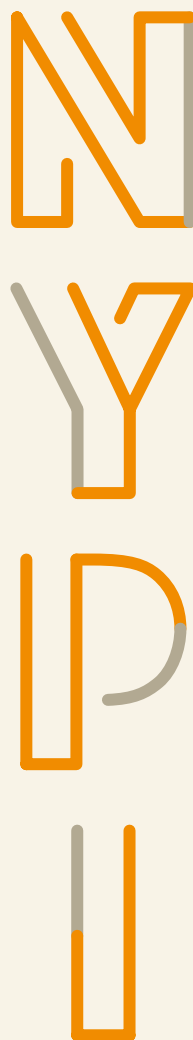


연구보고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신동훈 김세현



연구보고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저 자 신동훈, 김세현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세현(덕성여자대학교 박사후연구원)

국문초록

지난 1990년대 말 IMF 위기나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회경제적 충격은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대해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확정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청년정책 연구의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청년 관련 정책연구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주제를 분류함과 동시에, 청년정책 연구의 주제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연구 수행 격차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와 주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받아 중앙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주요 출연기관 등에서 관리 및 수행한 청년정책 연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및 정책 연구관리포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청년정책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후 분석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요약(초록) 또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토픽은 내용 분석을

거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류체계에 대응해 재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분류된 사항에 근거하여 분야별 청년정책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1,165편이었으며,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연구, 실태조사(패널조사), 일반보고서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 일반보고서 총 23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토픽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응한 결과 일자리 11개, 주거 1개, 교육 4개, 복지·문화 4개, 참여·권리 3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연구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일자리 73.4%, 주거 2.9%, 교육 10.5%, 복지·문화 8.3%, 참여·권리 4.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예산과 비교하면, 일자리 분야는 추진되는 과제 수나 예산에 비해 축적된 연구가 많으나, 주거와 교육 분야는 이와 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문화와 참여·권리 영역은 정책 규모와 연구간 괴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두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작고, 다른 영역과 중첩되는 사항이 많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소멸 이슈 등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연구수행 정도는 대체로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지역은 큰 차이가 있었다.

향후 추진할 청년정책연구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청년기 문제의 성격이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융합적 접근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분야 별로 추진이 필요한 연구 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년정책연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동향분석, 텍스트 마이닝,
토픽모델링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된 청년정책연구의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동향을 분석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데 있음.
-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청년정책연구가 어떠한 주제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주제를 분류함과 동시에 주제의 변화 양상 등을 살피고자 함.
-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연구의 동향과 분야별 연구 수행 격차 등의 현황을 이해하여 향후 수요 발생 또는 정책연구 필요 분야를 진단함으로써 원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연구대상은 중앙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주요 출연기관 등에서 관리 및 수행한 청년정책연구임.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통해 주요 기관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및 정책 연구관리포털 등을 통한 추가 자료 수집과정을 거쳐 청년정책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였음.
- 수집된 자료의 요약(초록) 또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 등을 통해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함. 이어서 도출한 토픽은 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류체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대응해 재분류하였음. 마지막으로 재분류된 결과에 근거하여 분야별 청년정책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3. 주요 결과

1) 청년정책연구 현황

- 이 연구에서 수집한 청년정책연구 자료는 총 1,165편이며,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연구, 실태조사(패널조사), 일반보고서 형태로 나눌 수 있음.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수립한 조례와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조치 마련의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며, 전체 청년정책연구 중 약 5.2%(60편)를 차지하였음.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실태조사는 청년 세대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성함으로써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체 연구의 약 3.2%(37편)를 차지하였음.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2013년 이전까지는 드물게 수행되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수행되는 추세임.
- 기본계획 수립연구와 실태조사를 제외한 연구는 대체로 청년의 경험 또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다루는 일반적 형태의 연구보고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체 자료의 약 91.7%(1,068편)가 여기에 해당하였음.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2000년 이전 드물게 수행되다가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고,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더해진 양상을 보임. 다만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2014년 다소 연구수행이 줄었으나 이후 전환기에 들어서며 문재인 정부 초기(2017~2018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일반보고서 형태를 보이는 연구를 발주기관별로 살펴보면, 총 1,068편의

청년정책연구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가 462편(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387편(36.2%)으로 뒤를 이었음. 정부중앙부처에서 발주한 청년정책연구는 219편(20.5%)으로 가장 적었음.

- 청년정책연구는 2015년 이전까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 중앙부처의 청년정책연구 수요는 꾸준하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과 중앙부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래 들어 연구 수요가 급증했음.
- 주요 중앙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89편(40.5%)으로 가장 많은 수행실적을 보였으며, 청년위원회를 포함한 국무조정실 16편(7.3%),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13편(5.9%), 기획재정부 9편(4.1%) 순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특별시 101편(26.6%)으로 가장 많은 청년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경기도 65편(17.2%), 경상북도 24편(6.3%), 경상남도과 충청남도가 각각 22편(5.8%)으로 뒤를 이었음. 지역별 연구수행 정도는 대체로 인구 규모에 비례하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서울시의 연구실적은 타 시·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음.
- 주요 연구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86편(20.8%)으로 가장 많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 77편(18.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6편(8.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2편(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편(6.3%) 순으로 나타났음.

2) 주요 키워드 및 주제

- 일반보고서의 요약(초록) 또는 연구필요성 및 목적 등을 활용해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한 결과 '경제', '일자리', '고용', '취업', '기업', '노동', '인력'과 같은 일자리 관련 단어들 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한편, '지원', '사업', '창업', '확대',

‘개선’, ‘제공’과 같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기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단어의 출현 빈도도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교육’, ‘대학’, ‘학교’, ‘훈련’ 등 교육 관련 단어 역시 중요 키워드로 등장하였음.

-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집한 자료는 총 23개의 토픽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토픽은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일자리’, ‘이주’, ‘가족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창업 활성화’, ‘주거’, ‘대학생 진로지원’, ‘직업능력개발’, ‘자산형성’, ‘노동 취약계층’, ‘여성 취업’, ‘사회갈등 해소’, ‘정책 체계화·내실화’, ‘문화·건강·안전’,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노동시장 미스매치’, ‘교육과 인재양성’, ‘국제협력 및 사례’,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 ‘현금성 취업지원’, ‘기본소득’, ‘농산어촌 활성화’로 명명할 수 있음.
- 토픽 분류 결과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분류 기준으로 대응시키면, 일자리 분야에 해당하는 토픽은 총 11개로 ‘지역사회와 일자리’, ‘인구구조 변화’, ‘창업 활성화’, ‘자산형성’, ‘노동 취약계층’, ‘여성 취업’, ‘정책 체계화·내실화’,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 ‘현금성 취업지원’, ‘농산어촌 활성화’가 여기에 속함. 주거 분야에 해당하는 토픽은 ‘주거’ 한 가지에 불과했음. 교육 분야에 속하는 토픽은 총 4개로 ‘대학생 진로지원’과 ‘직업능력 개발’, ‘노동시장 미스매치’, ‘교육과 인재양성’이 여기에 해당함. 복지·문화 분야에도 ‘이주’, ‘가족구조 변화’, ‘문화, 건강, 안전’, ‘기본소득’ 등 총 4개에 해당하는 토픽이 분류됨. 참여권리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토픽은 ‘지원체계 구축’, ‘사회갈등 해소’, ‘국제협력 사례’였음.

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 청년정책연구는 2002년에 들어서면서 그 이전보다 연구수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까지는 일자리와 교육 분야 위주로 연구 주제가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음. 이와 같은 경향은 2007년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청년연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변화하였음. 복지와 문화, 참여 권리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적은 수지만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주거와 관련된 연구는 2014년 처음 시작된 이후 꾸준히 수행되고 있음.

- 일자리 분야는 전체 청년정책연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임. 세부 토픽별로는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연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정책체계화 및 내실화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임. 현금성 취업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부조 정책의 경우 2002년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으나 2013년 이후 다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청년 창업과 지역사회 일자리와 관련한 연구는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일자리 분야 연구는 2013년 이전에는 주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 이후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연구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전체 청년정책연구에서 주거와 관련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나,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임. 주거 분야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중앙부처나 연구기관에서의 수행 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내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유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을 도입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중앙부처의 경우, 1인 가구 지원, 셰어하우스 가이드라인 마련, 최저주거기준 마련,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과 같이 주거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교육 분야 연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2021년 기간에는 전체 연구의 단 3.1%만이 관련 연구로 분류되었음. 세부 주제별로는 '교육과 인재양성' 토픽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학생 진로

지원' 토픽의 경우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직업능력개발' 토픽의 경우 2008-2012년 33.3%에서 2017-2021년 6.7%로 하락하는 등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대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미스매치 현상에 관한 정책연구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교육과 관련한 청년 연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었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교육 관련 연구수행 실적이 많지 않은 점이 특징적임.

- 복지·문화 분야 연구는 2008-2012년 전체 연구의 11.4%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2017-2021년 전체 연구의 8.4%를 차지해 그 비중이 다소 줄었음.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시기를 막론하고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임. 다른 주요 주제의 경우 2002년 이전에는 '문화·건강·안전'이었고 2008-2012년에는 '이주'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음. 또한, 2013년 이후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복지·문화 분야 연구 주제를 다변화 시켰음. 발주기관별로는 지난 2013년 이전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복지·문화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7-2021년에는 전체 연구의 65.9%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한 결과가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참여·권리 분야 연구는 2003년 이후 전체 연구의 약 5% 내외 수준으로 꾸준히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시기를 막론하고 사회갈등 해소가 중요한 토픽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음.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는 2013-2016년 시기에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3년 이후부터는 국제 협력 및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발주기관별로는 2017년 이전까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음.

4. 결론 및 시사점

- 연구 분야별 수행 격차는 다각도로 관찰되었음. 분야별 연구수행 실적은 일자리 73.4%, 주거 2.9%, 교육 10.5%, 복지·문화 8.3%, 참여·권리 4.9%로 나타났으며, 연구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이 확인됨. 일자리 분야는 추진되는 과제 수(34.8%)나 예산(34.5%)에 비해 축적된 연구가 많으나, 주거와 교육 분야는 이와 반대 양상을 보임. 복지·문화와 참여·권리 영역은 정책과 연구간 괴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두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작고, 다른 영역과 중첩되는 사항이 많아, 분류체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
-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는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증한 연구수행 영역임. 여기에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농산어촌 활성화, 임대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지방소멸 관련 이슈와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배당과 같은 기본소득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 연구수행 정도는 대체로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시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 연구수행 실적이 두드러지게 많았던 반면, 인천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행 실적을 보였음. 이에 따라 연구 주제의 다양성이나 지속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었으며,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향후 추진할 청년정책연구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기 경험하는 문제가 아동청소년기 등에서 비롯되고 청년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근거한 융합적 접근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임.

차 례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연구보고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5
- 3. 연구방법 6

II. 청년정책 추진 배경 및 체계

- 1. 청년기본법 11
- 2. 청년정책 기본계획 16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범위 및 수집절차 27
- 2. 분석방법 및 연구절차 31

IV. 청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 1. 청년정책연구 현황 37
- 2. 주요 키워드 및 주제 45

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74

V. 결론 및 시사점

1. 청년정책연구 현안 및 발전방안 89

2. 분야별 청년정책연구 수요 93

참고문헌 97

부 록 101

표 목차

표 I-1. 전문가 자문 내용	7
표 I-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내용	8
표 II-1. 청년기본법 입법과정	14
표 III-1. 지방자치단체 주요 출연기관	30
표 III-2. 전문가 자문 개요	34
표 IV-1. 청년정책연구 현황(주요 중앙부처별)	43
표 IV-2. 청년정책연구 현황(주요 연구기관별)	45
표 IV-3. 청년정책연구 주요 키워드 출현빈도 및 TF-IDF	47
표 IV-4. 토픽 분류 결과(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I	51
표 IV-5. 토픽 분류 결과(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II	54
표 IV-6. 토픽 분류 결과(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III	56
표 IV-7. 토픽 분류 결과(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IV	59
표 IV-8.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LDA 분석 결과 분류 I ..	61
표 IV-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LDA 분석 결과 분류 II ..	64
표 IV-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LDA 분석 결과 분류 III ..	69
표 IV-1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LDA 분석 결과 분류 IV ..	71
표 IV-12. 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 분류 결과	73
표 V-1. 분야별 사업, 예산, 연구 주제, 연구 수행 실적 비교	91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6
그림 II-1. 청년실업률 추이	12
그림 II-2.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18
그림 III-1. 분석 절차	34
그림 IV-1. 청년정책연구 현황(목적별)	38
그림 IV-2. 청년정책연구 현황(연도별)	39
그림 IV-3. 청년정책연구 현황(발주기관별)	40
그림 IV-4. 청년정책연구 현황(연도 및 발주기관별)	42
그림 IV-5. 청년정책연구 현황(광역자치단체별)	44
그림 IV-6. 청년정책연구 주요 키워드(워드클라우드)	46
그림 IV-7. 적정 토픽 수 도출을 위한 분석 결과	49
그림 IV-8. 분야별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75
그림 IV-9.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76
그림 IV-10.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 토픽 비중 변화	77
그림 IV-11.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78
그림 IV-12. 주거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79
그림 IV-13. 주거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79
그림 IV-14. 교육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80
그림 IV-15. 교육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 토픽 비중 변화	81
그림 IV-16. 교육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82
그림 IV-17.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82
그림 IV-18.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 토픽 비중 변화	83
그림 IV-19.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84
그림 IV-20.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85

그림 IV-21.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 토픽 비중 변화	85
그림 IV-22.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86

○————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오랫동안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이 시기는 생애 주기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잇는 이행기의 특성을 가졌지만, 완숙에 가까운 신체와 정신을 지녔기에 그간 돌봄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시기에 비해 주목의 정도가 적은 편이었고, 겪게 될 어려움 역시 자연스레 거쳐야 할 과정이자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구조의 고착화 속에서 이행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청년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점차 형성되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말 IMF 위기와 함께 높아진 청년실업률은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악조건 속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자산형성, 결혼, 주거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청년층이 직면하는 문제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앞장서 청년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추진 및 기본계획 이행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가 특정한 분야에 편중된 점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주로 청년실업으로부터 제기된 까닭에 일자리 및 고용 등과 관련한 연구 주제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걸쳐 집약적으로 청년정책연구의 외연이 확장된 결과가 분야마다 연구의 양적·질적인 집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별 정책연구 집적 수준의 차이는 분야 간 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청년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만큼 수행되어 왔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부족해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 또는 주제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정책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분야별 연구 수행 격차 등과 같은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수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 연구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주요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그동안 수행한 청년정책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연구가 어느 주제를 중심으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주요 주제를 분류하였다. 또한, 각 주제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체계에 대응해 재분류하고 시기별 변화 양상 등을 분석해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연구 수행 격차 등의 현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연구 수행이

필요한 영역 및 과제 수요 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청년정책연구가 그동안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주제로 얼마만큼 수행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수행의 핵심적 사안은 분석대상에 맞는 연구를 적절히 포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 자료수집의 대상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주요 출연기관 등에서 관리 및 수행한 연구이며,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 기관 포털 및 정책연구관리 포털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였다.

청년정책연구의 현황 파악과 동향 분석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집된 자료의 요약(초록) 또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 등을 통해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한 토픽은 내용 분석을 토대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류체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대응해 재분류하였다. 이어서 재분류된 체계를 기본으로 분야별 청년정책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연구 필요 또는 수요 발생 분야를 진단함으로써 원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청년 정책연구는 시기별로 얼마나 어떤 주체에 의해 수행되었는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증가해 왔는지, 어떠한 기관이 청년정책연구에 대해 전문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어떠한 연구영역에서 청년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갖는지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청년정책연구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고, 주제별 수행 실적은 어떠하며, 시기에 따른 변화는 어떠한지’이다. 이를 통해 연구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수요 발생 또는 정책연구 필요 분야를 진단하였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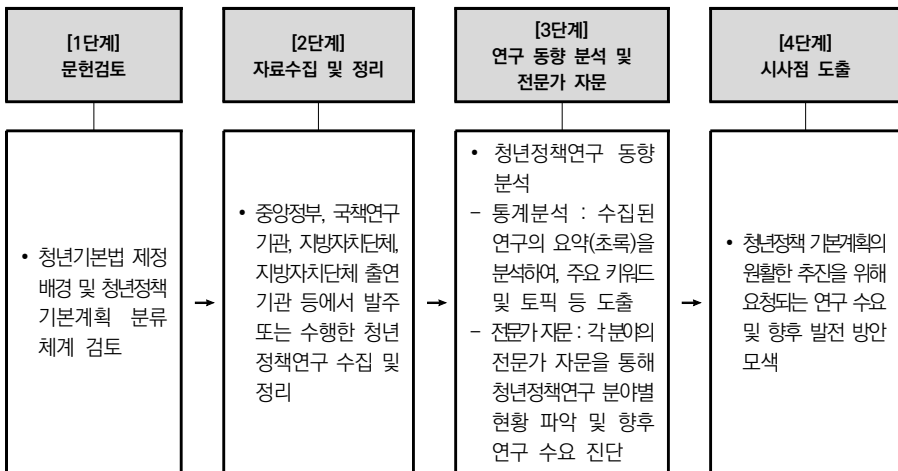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1) 청년정책연구 수집 및 정리

청년정책연구에 부합한 연구를 적절하게 포괄하기 위해서 자료의 수집 및 정리는

- ① 청년정책연구의 범위 설정 ② 자료 검색의 키워드 설정 ③ 연구대상 기관 및

시간적 범위의 설정 ④ 자료 협조 및 자료 수집 ⑤ 자료 타당성 검증 및 정리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2) 청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청년정책연구 동향 분석은 크게 세 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수집한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과 함께, 각 연구의 초록(요약 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여 자료를 정제하고, 여기에 토피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주요 주제를 분류하였다. 둘째, 분류한 주요 주제를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의 체계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셋째, 재분류한 틀을 바탕으로 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과제 발주처, 연도별 연구 현황 등과 연구주제 및 분야별 동향 분석, 그리고 분야별 연구 수행 격차와 관련한 시사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3) 전문가 자문

청년정책 연구자, 관련 학과 교수,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연구의 동향 및 향후 수요 등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여 연구 방향 설정, 연구 결과 해석, 시사점 도출 등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자문 내용과 시기, 자문진 구성은 다음의 <표 I-1>과 같다.

표 I-1. 전문가 자문 내용

자문시기	자문내용	자문진
1차 6월	-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및 시사점	김**(한국○○○○연구원), 김**(○○○○부), 박**(○○연구원), 변**(○○연구원), 신**(○○○○대학교), 정**(한국○○○○연구원), 정**(한국○○○○연구원), 유**(○○연구원), 윤**(○○재단), 함**(○○대학교)
2차 8월	- 청년정책연구 분석결과 및 향후 과제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청년정책연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된 연구결과 활용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관계자와 정책실무협의회 등의 방식으로 소통하였다. 관련 시기와 내용 등은 <표 I-2>과 같으며,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였다.

표 I-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내용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차	청년정책연구 자료수집을 위한 방안 논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	5월
2차	청년정책연구 현황 공유 및 분석방안 논의		6월
3차	청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결과 논의		8월



제2장 청년정책 추진 배경 및 체계

- 1. 청년기본법
- 2. 청년정책 기본계획

1. 청년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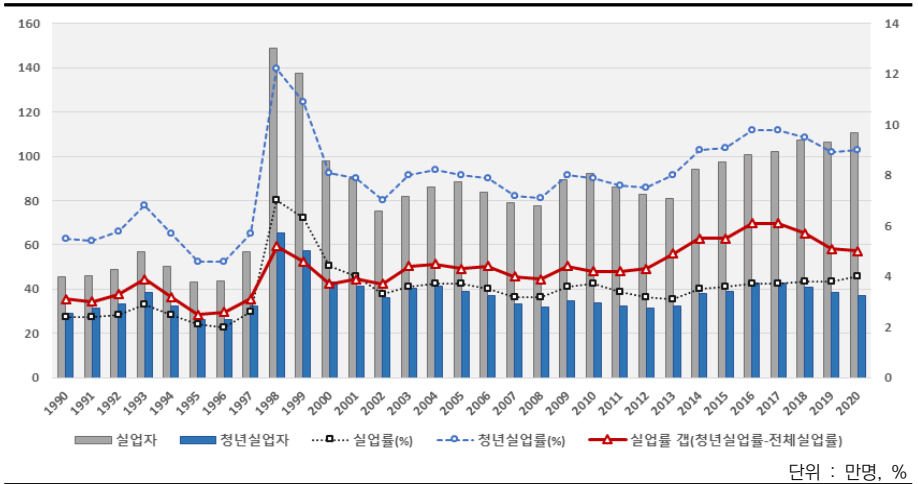
1) 청년기본법 제정 배경 및 과정¹⁾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국무조정실로 안착하고, 같은 해 12월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각 시·도지사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여 다방면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청년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배경에는 IMF 이후 지속된 청년의 높은 실업률과 사회진출 지체 등으로 인해 성인으로의 이행의 어려움이 더욱 복합적으로 변모하고 그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이다(배정희, 김기현, 2020).

국내의 실업자 수는 1996년까지 60만 명을 넘기지 않았고, 청년실업률 역시 대체로 5~6%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IMF 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양산되어 그 수가 절정에 달하게 되었고, 이때 청년 실업자의 증가 폭은 전체 실업자의 증가 폭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청년실업률은 기존의 두 배에 가까운 12.2%를 기록하였다. 이후 전국민적 노력으로 전체적인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 어려움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으나, 청년실업

1) 이 항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등과 관련한 국회의안 자료를 인용해 구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03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실업해소특별 법안이 제안되었고, 2004년 본회의를 통과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공포 되기에 이르렀다.



*출처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년 6월 20일 검색 및 인출.

그림 II-1. 청년실업률 추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기존 경제위기에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일자리 및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가 맞물려 청년실업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력 활용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08년 12월 31일에 종료 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의 악화가 예상되자 국회는 2008년 법안 개정을 통해 유효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이어서 2009년에는 법제명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수정하면서 청년고용 촉진특별위원회 설치와 정부의 고용지원서비스 및 정부, 기업, 대학 등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청년의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개정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법률안 개정을 통해 2013년 당해 12월 31일 예정된 종료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공공부문 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관련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8년 개정을 통해 해당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재연장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의 악화로 인해 다방면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취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교로부터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의 지체는 단순히 사회진입 시기를 늦춘 것만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까지의 기간과 그로 인한 혼인 시기, 주거 문제해결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층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여전히 이행기에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2014년부터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법안이 제안되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3건의 청년발전기본법안은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청년 관련 기본법이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기본법안, 그리고 청년발전기본법안 등으로 여러 차례 발의되면서, 청년미래 특별위원회를 2017년 11월 구성하게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청년연령, 예산 확보 등과 같이 쟁점이 되는 사안의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제정을 완료하게 되었다.

표 II-1. 청년기본법 입법과정

제안일자	의안명	의결결과	비고	
2014.03.13.	청년발전기본법안 (박기춘 의원 등 27인)	임기만료폐기	19대 국회	
2014.05.22.	청년발전기본법안 (김상민 의원 등 53인)	임기만료폐기		
2015.11.09.	청년발전기본법안 (김광진 의원 등 11인)	임기만료폐기		
2016.05.30.	청년기본법안 (신보라 의원 등 122인)	대안반영폐기	20대 국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 (2017.11.09.) 및 위원회 합의 등의 결과로 이명수 의원 등 18인 중심으로 청년기본법안 발의 (2018.05.21.)	
2016.08.17.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 의원 등 10인)	대안반영폐기		
2016.08.24.	청년기본법안 (이원욱 의원 등 10인)	대안반영폐기		
2016.12.02.	청년발전기본법안 (김해영 의원 등 12인)	대안반영폐기		
2017.04.13.	청년기본법안 (박주민 의원 등 26인)	대안반영폐기		
2017.06.30.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강창일 의원 등 12인)	대안반영폐기		
2018.02.19.	청년기본법안 (채이배 의원 등 11인)	대안반영폐기		
2018.11.30.	청년발전지원법안 (신보라 의원 등 14인)	대안반영폐기		
2019.11.28.	청년기본법안(대안) (정무위 위원장)	원안가결		국회 본회의 통과(1월) 및 제정(2월)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2021년 6월 20일 검색 및 인출.

2) 주요내용²⁾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 청년의 연령,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사업영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2) 이 항은 「청년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서 연령 규정은 법령 제정과정에서 쟁점이 있던 부분이었다(배정희, 김기현, 2020). 이는 청소년 연령, 투표권, 지자체 조례 등 다른 법체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령에 가까운 개념인 청년을 정의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연령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괴리감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외 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항에 따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다. 청년정책연구의 범위 설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료의 범위를 설정할 때 추가로 다루도록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의 기본권, 의사 표현의 자유와 결정 권리, 조건과 배경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가정·사회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서 청년이 처한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행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은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기획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하역금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관하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립된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기본계획 결과에 관한 분석·평가, 자원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 12월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 및 발표되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2. 청년정책 기본계획³⁾

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체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개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구현의 밑바탕을 그리고자 수립되었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한 데에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미래 변화를 선도케 하려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은 이와 같은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원칙이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구성된 다섯 가지 분야의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각 분야는 각각 네 가지의 중점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일자리는 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②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③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④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과 같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중점과제는 총 94개의 세부과제로 나뉘지며, 고용부, 행안부, 기재부,

3) 이 절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자료를 인용하고 해석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여가부, 산업부, 인사처, 병무청, 중기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과기부, 문체부 등의 정부부처가 관련 과제를 소관하여 추진하게 된다.

다음으로 주거는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 ②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③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 분야의 세부과제는 총 24개이며,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이 관련 청년정책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 ②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총 8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등이 관여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문화 영역에서는 ①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② 청년건강 증진 ③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중점과제로 포함한다. 이와 같은 중점과제는 총 37개의 세부과제로 나뉘지며, 복지부, 국방부, 금융위, 여가부, 문체부, 국토부, 교육부 등에서 관련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는 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②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③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④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개의 세부과제가 국조실, 교육부, 국토부, 법제처, 행안부, 고용부, 문체부, 중기부, 외교부 등의 주도하에 시행될 계획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당해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된다. 지난 2021년 3월 30일 발표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세부과제가 270개에서 308개로 확대 및 구체화되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과제에 배정한 예산에 따라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게 된다(관계기관합동, 2021).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그림 II-2.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용

(1) 일자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지난 1997년 발생한 IMF와 2007년 세계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자리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20만 명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수당 지급 등을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훈련비를 지원하여 취업역량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창업 지원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창업과 관련해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를 거쳐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농수산업이나 전통시장, 전통문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사업 등이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 정책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일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 및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청년 친화적, 가족 친화적,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청년층의 주된 이직 요인을 제거하여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취업난과 함께 이어진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 절차를 개선해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삼은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주거

청년층이 겪는 주거 문제는 청년기에 경험하는 이행기적 특성으로 인해 복합적이다. 대학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항도 각각 다르다. 더구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 진출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5대 정책 분야 가운데 하나로 주거를 다루면서 높은 관심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의 주거부담 감소’를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공급 확대와 비용 지원을 통해 1인 가구, 신혼부부, 대학생 등 다양한 대상의 정책 수요를 해소하고자 한다. 공급의 방식은 공적 임대주택과 특화주택, 그리고 기숙사 확충 등으로 진행되며, 비용 지원은 미혼 청년에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하거나 전세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거 분야에는 주거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격차 해소의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 등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청년에게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하는 방안과 노후고시원, 반지하주택 등을 매입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공급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주거 분야에는 청년층의 참여와 주도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청년주택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청년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청년친화형 주거 모델을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주거, 교육이 융합된 특구를 지방 광역시 중심지에 조성하여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다.

(3) 교육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기준으로 교육 분야(83개)는 일자리 분야(94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청년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청년기 교육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다루고 있다.

청년이 스스로 삶의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를 제한하지 않게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학습 또는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진로 지원 강화 방안으로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기관과 일자리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취업과 사회 안착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의 역량 강화 방안은 어떠한 콘텐츠를 다룰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미래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신산업, 그린·에너지, 문화관광·미디어·지식재산 등 향후 주도적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에서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교육과정 개편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원격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게 되면서 기존 운영하던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를 강화하고, 대학 원격교육 질제고 방안을 모색하며, 평생교육 플랫폼 마련에 힘쓰는 등의 노력도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면 교육과 일자리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4) 복지·문화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복지와 문화 두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복지와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시기의 특성에 주목하여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기에 짊어지기 쉬운 부채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초기 발견·상담·치료까지의 전주기적 연계 체계로 마음건강을 지원하거나, 자살 또는 각종 중독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무료 대상자를 확대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장하는 등의 정책은 청년의 신체건강 지원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예방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바우처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특수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복지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터라 다양한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년, 청년한부모, 이주배경 청년, 청년 1인 가구와 같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과 청년 장애인, 빈곤청년과 같이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생활 지원과 문화산업 육성으로 구분한 접근이 두드러진다. 이 중 문화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생활인프라 확충과 문화콘텐츠 체험 지원,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급 등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게임문화나 비대면 콘텐츠산업 육성, 그리고 청년 예술가 및 창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문화산업 육성의 경우 창업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일자리 분야로 재편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참여·권리

참여·권리는 청년이 청년의 삶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청년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3대 원칙과 정책방향 수립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다.

청년참여위원회, 청년거버넌스 운영,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국제교류 등은 청년 참여와 청년정책 수립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을 위한 지역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은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조장하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 첫출발에 놓여 있는 청년은 자신의 권익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대학, 청년공간, 근로보호센터 등에서 관련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금융·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참여·권리 영역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및 내실화와 관련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 걸쳐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정책 역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년의 참여 및 권리에 대한 강조는 의미가 있다. 다만, 참여·권리 분야가 담고 있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반 조성과 관련한 사항만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체계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 제3장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범위 및 수집절차
- 2. 분석방법 및 연구절차

1. 연구자료 범위 및 수집절차

1) 연구자료 범위 설정

청년정책연구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하는 연구자료의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 이 연구가 특정한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을 뿐더러, ‘청년’은 연구 주제보다 그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보이므로 청년정책연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연구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 청년을 특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서는 연령 기준을 통해 청년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기본법에서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만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청년의 기준 연령이 서로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청년 연령을 만 18세에서 34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만 19세에서 39세로 정의하는 등 연령 기준에 동일한 잣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체별로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이에 근거하여 정책연구를

엄밀하게 한정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기본법의 시행이 20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기본법의 연령 기준을 과거에 수행된 연구에 소급 적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군다나 청년이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진행한 연구는 사실상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연구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청년’과 관련해서는 그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기보다 큰 틀에서 청년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적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정의하고, 각 연구에서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했는지 여부와 이를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개별 연구에 따라 청년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밝히는 것은 이 연구의 관심이 아니므로 개별 연구에서 활용한 청년 개념에 대한 해석 또는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라는 정의를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발주로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의 계약 체결 후 추진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다(행정자치부, 2016). 이 연구에서 제시한 ‘청년’과 ‘정책연구’에 대한 개념에 근거하여 설정한 청년정책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정책연구
 - 연구제목에 ‘청년’(또는 후기 청소년, 2030, 20대, 성인기 이행 등 유사 키워드)을 포함하는 정책연구
- (2) 청년의 경험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정책연구
 - 다수의 청년이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주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예 : 고등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 이행, 저출산 등 이행기 관련 주제)

- 청년층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연구주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예 : 노동시장 변화와 실업, 고령화, 고학력화, 일자리창출, 근로 및 복지취약계층)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연구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정부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중앙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드러낸다. 또한,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디지털화가 진행된 자료에 한해 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자료수집 절차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진은 포괄적 자료수집 - 자료 적합성의 교차검증-협의 및 확정 과정을 거쳤다. 우선, 포괄적 자료수집은 크게 세 가지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지난 3년간 수행한 청년정책연구 목록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민선 6기(2014년)이래 수행한 청년정책연구 목록을 수집하였다. 둘째,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청년'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를 목록화했다. 셋째, 각 국책연구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주요 출연기관 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청년'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고용정보원이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은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주요 출연기관으로는 각 지자체 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연구 보고서를 수집하였는데 대상기관 목록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지방자치단체 주요 출연기관

시·도	기관명	시·도	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경기연구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강원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강원문화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강원연구원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충북연구원
	대구여성가족재단		충북여성재단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여성가족재단		충남문화재단
	인천복지재단		재단법인 충청남도복지재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광주여성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광주복지재단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라남도	광주전남연구원	전라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경상북도	전남복지재단
	대전세종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대전복지재단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	경상남도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세종특별자치시	울산문화재단		제주연구원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다음으로 자료의 적합성 검증 및 협의 과정을 위해 먼저, 중복된 자료를 제외한 후, 해당 자료가 청년정책연구 기준에 적합한지 연구진 간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자는 연구의 제목과 초록의 일부를 토대로 청년정책 관련 여부에 부적합, 검토필요, 적합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이 연구진 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청년이 얼마만큼 연구의 중심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해당

연구의 내용에 대한 개별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이후 각 연구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 및 협의하여 청년정책연구로 분류되는 최종 분석 자료를 확정하였다.

2. 분석방법 및 연구절차

1) 빅데이터를 활용한 동향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이란 특정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통계적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의 성과를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분석방법을 지칭한다. 이러한 메타분석을 통해 과거 수행된 연구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구문제에 대한 단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엄밀한 의미에서 메타분석은 여러 양적 연구결과를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통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결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메타분석은 일종의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로써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현실 속에서 개별 분야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컴퓨터 기술의 향상과 확률적 방법론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 알고리즘의 등장은 새로운 메타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자료가 디지털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연구결과물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수행되는 대다수의 메타분석 연구들은 이 같은 큰 규모의 비정형 데이터를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Mützel, 2015).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메타분석은 특정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방법론적 장점이다(신동훈, 김세현, 2020).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메타분석 연구들은 소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되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중심의 토픽 분류 연구가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 기반한 연구는 자료의 크기와 분류 토픽 수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각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문서 속 단어 출현 빈도 등에 근거해 계산된 확률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 특성상 오분류의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청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청년정책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토픽모델링 기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 기법을 활용하였다. LDA 기법은 일종의 문서군이라 할 수 있는 문서 집단에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기 위해 베이저안 추정 방식을 기반으로 문서 속 단어 빈도를 계산하여 토픽별 단어 출현 사후 확률의 근사치를 계산한다(Blei, Ng, & Jordan, 2003). 자연어 처리 및 LDA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인 R(4.1.0)의 RmecabKo, RcppMeCab, topicmodels, tm, ldatuning, LDAvis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2) 청년정책연구 동향 분석절차

주제 분류를 위한 분석대상인 각 연구보고서의 요약 부분은 텍스트로 구성된 비정형 자료이다. 이 같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된 자료를 정형화하는 작업인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선행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란 비정형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 및 가공하는 방법들을 통칭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법(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활용해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분석 가능한 수준의 자료로 정형화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였다.

텍스트 자료의 정형화 작업 이후에는 LDA 기법을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토픽 모델링 수행에 앞서 연구자가 문서에서 도출할 적합한 토픽의 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픽이 분류하는 단어의 정확도를 기반으로 적정 토픽 수를 산출하였다(Arun et al., 2010; Cao et al., 2009; Deveaud, SanJuan, & Bellot, 2014; Griffiths & Steyvers, 2004). 분석을 위한 최적 토픽의 수를 결정한 이후에는 LDA를 기법을 활용하여 토픽을 분류한 뒤, 각 토픽을 대표하는 문서 및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개별 토픽마다 명칭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토픽명을 확정하였다.

각각의 토픽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류체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각 토픽의 내용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세부 과제 등과 비교 분석해 재분류한 결과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마지막으로는 분야별로 분류한 체계를 토대로 시기에 따라 분야별·발주기관별 연구수행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야별 세부주제의 다양성은 어떠한지 등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국내 청년정책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시사점 및 향후 연구 수요를 진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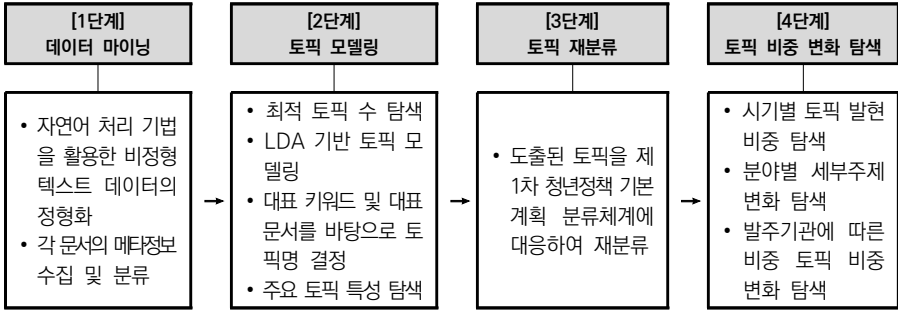


그림 III-1. 분석 절차

3) 전문가 자문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연구동향 분석절차에 따른 각 결과 확인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참여 전문가는 총 10명이며,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교 교수, 공무원, 청년지원 유관기관 사업 운영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문 내용은 연구 초기 청년 정책연구의 배경을 이해하고 연구 설계에 도움을 받고자 관련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한 차례 실시하였으며, 이후 청년정책연구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검토 및 향후 청년정책연구 수요 파악을 위해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2. 전문가 자문 개요

자문시기	자문내용	자문진	형태
1차 6월	- 연구 설계 및 청년정책연구 현황 이해를 위한 전문가 자문	유**(○○연구원 / A)	자문회의
2차 8월	- 연구수행 과정, 분석결과 검토 및 향후 청년정책연구 수요 파악을 위한 전문가 자문	김**(한국○○○○연구원 / B), 김**(○○○○부 / C), 박**(○○연구원 / D), 변**(○○연구원 / E), 신**(○○○○대학교 / F), 정**(한국○○○○연구원 / G), 정**(한국○○○○연구원 / H), 윤**(○○재단 / I), 함**(○○대학교 / J)	이메일을 통한 서면자문

○ — 제4장 청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 1. 청년정책연구 현황
- 2. 주요 키워드 및 주제
- 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1. 청년정책연구 현황

연구진은 국무조정실 협조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각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지자체 포털 및 지자체 출연기관 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총 1,165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절에서는 자료를 몇 가지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현황을 제시하였다.

1) 연도별 연구 추이

국내에서 수행된 청년정책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목적과 형식에 따라 크게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실태조사, 일반보고서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IV-1>은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총 1,165편의 청년정책연구 보고서를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결과이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조례와 청년기본법과 같은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연구는 전체 청년정책 연구 중 약 5.2%(60편)를 차지하였다.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세대의 종합적인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에 목적을 두고 수행한

조사이며,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청년 시기에 도래하거나 청년을 조사 시작 시점으로 삼는 패널자료 등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전체 연구의 약 3.2%(37편)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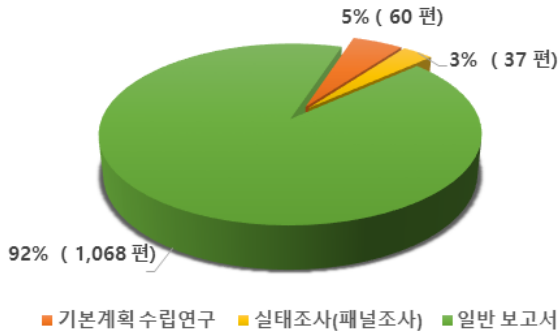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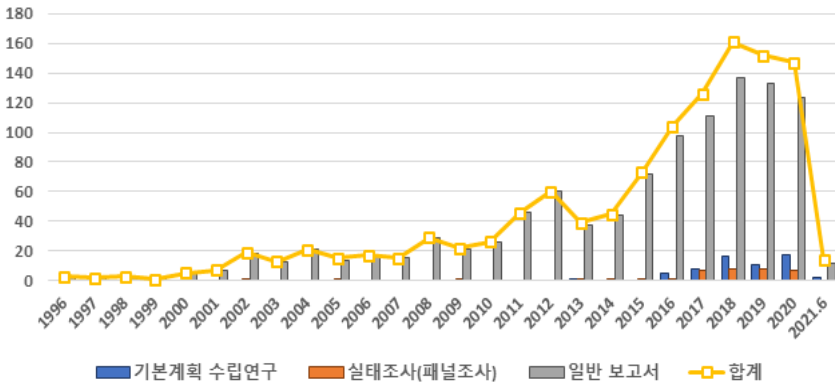


그림 IV-1. 청년정책연구 현황(목적별)

기본계획 수립연구와 실태조사의 성격을 가진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다루는 일반적 형태의 연구보고서 전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전체 자료의 약 91.7%(1,068편)를 차지했다.

〈그림 IV-2〉는 1996년부터 2021년(6월)까지 수행된 청년정책연구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보고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드물게 수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연 20편 내외의 보고서가 꾸준히 발간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2008년을 기점으로 재차 증가하고 2012년에는 연 60편의 정책보고서가 발간되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변화에는 1997년 발생한 IMF와 2007년부터 진행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청년 실업률 상승이 관련 연구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정책연구의 수행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2014년 사이 다소 줄었으나 이후 전환기에 들어서며 문재인 정부 초기(2017~2018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양적으로 성장한 현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축제목 : 보고서 편수, 연도

※ 2021년은 6월까지 현황이며, 보고서의 상당수가 연말에 마감되는 점을 감안해 이 연구에서는 해당 수치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않음.

그림 IV-2. 청년정책연구 현황(연도별)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는 드물게 수행되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수행되는 추세이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도 이와 더불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와 청년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증가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차원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청년 지원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조례 및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이 뒷받침되었고, 청년층이 처한 현실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2) 발주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별 연구 현황

앞서 제시한 청년정책연구의 유형 중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의 경우 그 수가 많지 않고, 일반적인 연구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번 절 이후부터는 청년정책연구 유형 중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제외한 청년정책연구 일반보고서 1,068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청년정책연구 현황을 발주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청년 관련 정책 연구의 주요 발주기관은 연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원을 비롯해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 학회 등을 포함한다. 중앙부처는 부, 처, 청, 원, 실,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항을 따랐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한 연구를 비롯해 주요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도 여기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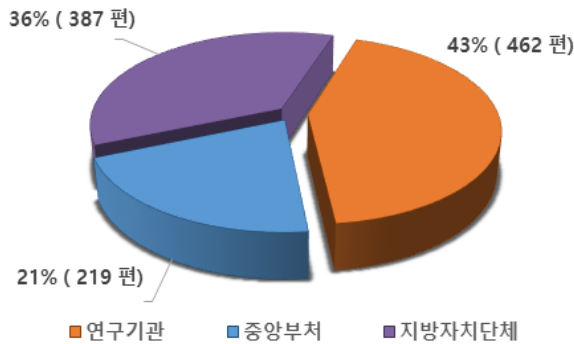


그림 IV-3. 청년정책연구 현황(발주기관별)

<그림 IV-3>은 발주기관별 연구 현황을 보여준다. 총 1,068편의 청년정책연구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가 462편(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가 387편(36.2%)으로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에서 발주한 청년정책 연구는 219편(20.5%)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기관의 대다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원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정부부처에서 발생하는 연구 수요를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기관과 중앙부처의 현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IV-4>는 연도별 청년정책연구 현황을 발주기관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들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이른 시기부터 연구를 수행해왔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 이전까지 청년정책연구를 주도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5년 이후에는 큰 폭의 변화 없이 연구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청년정책연구 수요는 꾸준하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연구기관이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과 중앙부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래 들어 연구 수요가 급증했음이 파악된다. 특히 2013년 6편에서 2019년 78편으로 발주한 연구가 13배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앞선 <그림 IV-2>와 비교하면 보다 세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청년정책연구 수행이 2018년 정점을 기록한 후 2019년과 2020년 다소 정체된 양상이 나타난 데에는 2019년에는 연구기관 및 중앙부처에서 수행한 연구의 감소, 202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연구의 감소가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본법 및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정 움직임이 있었던 기간(2019년~2020년)에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관련 연구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연구 활성화가 일시적으로 둔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청년기본법의 시행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었던 2020년에 연구 수행을 줄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면,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투입된 자원이 향후 청년정책연구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경우 청년정책연구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이후의 시계열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청년지원을 위한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조정기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연구주체의 포화 및 한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정태기에 접어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향후 관찰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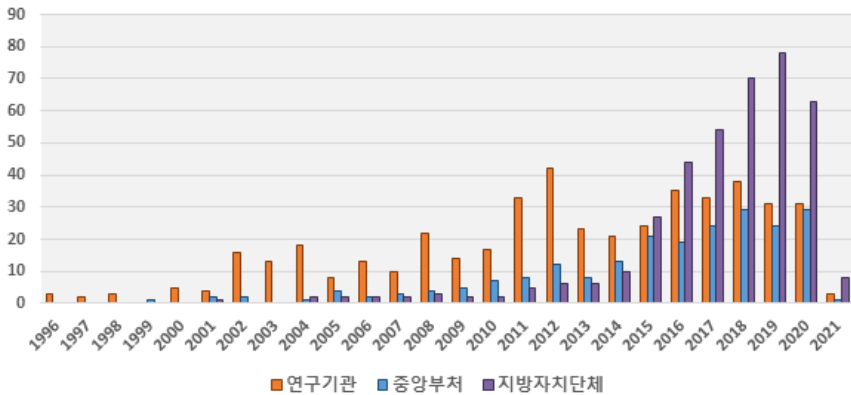


그림 IV-4. 청년정책연구 현황(연도 및 발주기관별)

다음으로 <표 IV-1>에서는 발주기관별 청년정책연구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주요 중앙부처에서 발주한 청년정책연구의 수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89편(40.5%)으로 가장 많은 수행 실적을 보였으며, 청년위원회를 포함한 국무조정실 16편(7.3%),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13편(5.9%), 기획재정부 9편(4.1%)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위원회(3.6%)를 포함하면 청년층의 고용과 일자리 관련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전체 연구의 44.1%를 차지하는데, 이는 IMF와 세계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지속된 청년실업 문제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정책을 다룬 중앙정부 차원의 기관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운영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기관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청년 정책을 담당했음에도 이룬 성과(7.3%)를 감안하면, 향후 해당 기관(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연구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IV-1. 청년정책연구 현황(주요 중앙부처별)

순위	발주 기관	보고서 편수	비율 (%)	순위	발주 기관	보고서 편수	비율 (%)
1	고용노동부	89	40.5	9	농림축산식품부	5	2.3
2	국무조정실(청년위원회 포함)	16	7.3	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5	2.3
3	교육부	13	5.9	1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	1.8
3	보건복지부	13	5.9	13	문화체육관광부	4	1.8
5	기획재정부	9	4.1	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	1.4
6	일자리위원회	8	3.6	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	1.4
7	여성가족부	7	3.2	15	정책기획위원회	3	1.4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7	15	중소벤처기업부	3	1.4
8	환경부	6	2.7	-	기타	18	8.2
9	국토교통부	5	2.3				

〈그림 IV-5〉는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정책연구 현황을 보여준다.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101편(26.6%)으로 가장 많은 청년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경기도 65편(17.2%), 경상북도 24편(6.3%) 경상남도과 충청남도가 각각 22편(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외한 청년 관련 연구가 1편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출범이 2012년으로 타 시·도에 비해 늦었고, 발주처 구분상의 누락(대전시 협동 수행 연구를 대전시로 분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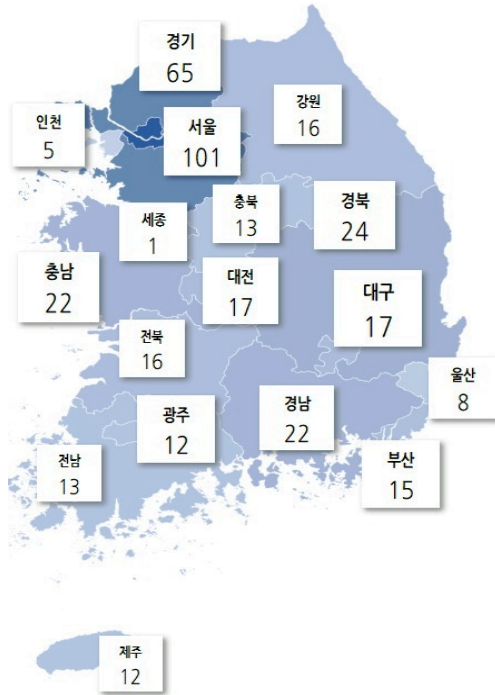


그림 IV-5. 청년정책연구 현황(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별 연구 수행 격차는 대체로 인구 규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구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 연구 수행 실적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청년정책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인구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구 수행 실적을 보여 대조되었다.

마지막으로 <표 IV-2>를 통해 주요 연구기관별 청년정책연구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86편(20.8%))으로 가장 많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77편(18.6%)), 한국여성정책연구원(36편(8.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32편(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6편(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 청년정책연구 현황(주요 연구기관별)

순위	발주 기관	보고서 편수	비율 (%)	순위	발주 기관	보고서 편수	비율 (%)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86	20.8	10	한국법제연구원	11	2.7
2	한국노동연구원	77	18.6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	2.7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6	8.7	10	한국행정연구원	11	2.7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2	7.7	14	산업연구원	10	2.4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	6.3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	2.2
6	한국교육개발원	18	4.4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2.2
7	한국개발연구원	15	3.6	17	국토연구원	8	1.9
7	한국고용정보원	15	3.6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1.2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	3.4	-	기타	9	2.2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					

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는 주관기관을 발주기관으로 처리하였음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연구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 관련 연구 수행 현황 가운데 직업, 노동, 청소년, 교육 등과 관련된 기관이 상위를 차지한 것은 청년의 이행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융합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의 개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며, 관련 핵심 연구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2. 주요 키워드 및 주제

이 절에서는 청년정책연구 중 일반보고서에 해당하는 1,068편의 자료에서 요약, 초록,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등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접근이 제한된 비공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총 1,012편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을 토대로 핵심 단어 추출 및 중요도 등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여 높은 모형 적합도를 보이는 적절한 수의 문서군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1) 주요 주제(비정형 텍스트 자료 분석 결과)

(1) 워드클라우드 및 핵심 키워드

〈그림 IV-6〉은 분석 대상이 되는 청년정책연구 보고서 초록에 포함된 단어들 중 핵심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경제’, ‘일자리’, ‘고용’, ‘취업’, ‘기업’, ‘노동’, ‘인력’과 같이 일자리 관련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 ‘사업’, ‘창업’, ‘확대’, ‘개선’, ‘제공’과 같이 청년을 위한 다양한 기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들과 관련된 단어들 역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 ‘대학’, ‘학교’, ‘훈련’ 등 교육 관련 단어 역시 청년정책에 있어 중요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림 IV-6. 청년정책연구 주요 키워드(워드클라우드)

〈표 IV-3〉은 출현빈도 기준 상위 50개 단어의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값을 제시한 것이다. 출현 빈도는 각 단어가 사용된 횟수를 뜻하며, TF-IDF 빈도는 각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역문서 빈도로 나누는 값을 뜻한다. 여기서 역문서 빈도란 한 개의 단어가 문서 전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문서의 수를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숫자로 나눈 값에 로그를 취하여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TF-IDF 값이 낮은 단어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 몇몇 문서에 편중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TF-IDF 값이 낮은 단어는 특정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표 IV-3. 청년정책연구 주요 키워드 출현빈도 및 TF-IDF

순위	주제어	빈도	TF-IDF	순위	주제어	빈도	TF-IDF
1	지원	4,285	.01037	26	운영	1,294	.013762
2	교육	3,743	.016402	27	증가	1,268	.010335
3	고용	3,672	.017364	28	기관	1,249	.012661
4	사업	3,257	.019474	29	활용	1,246	.00825
5	지역	2,914	.021769	30	효과	1,240	.009422
6	일자리	2,849	.017674	31	세대	1,200	.030709
7	여성	2,667	.04169	32	가능	1,192	.007192
8	취업	2,521	.016612	33	개선	1,170	.010048
9	기업	2,224	.01749	34	가구	1,167	.048037
10	경제	2,085	.008967	35	체계	1,164	.009779
11	노동	2,083	.015025	36	제시	1,160	.007874
12	대학	2,073	.024947	37	과정	1,155	.00909
13	제도	1,708	.012576	38	평가	1,101	.014103
14	직업	1,655	.021445	39	산업	1,095	.01427
15	시장	1,653	.011984	40	확대	1,077	.008478
16	개발	1,623	.012352	41	실업	1,076	.017234
17	참여	1,573	.012136	42	훈련	1,073	.022848
18	창업	1,560	.051374	43	프로그램	1,042	.015817
19	인력	1,497	.016694	44	구조	1,038	.008427
20	대상	1,482	.007294	45	국가	979	.010115
21	서비스	1,442	.018296	46	능력	974	.015201
22	변화	1,422	.010458	47	소득	966	.017355
23	활동	1,404	.012543	48	제공	949	.0094
24	정부	1,358	.008475	49	한국	942	.011429
25	추진	1,329	.009958	50	주택	936	.053794

먼저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청년정책연구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 단어는 '지원', '교육', '고용', '사업', '지역', '일자리', '여성', '취업', '기업', '경제'로 나타났다. 한편 문서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한 TF-IDF값을 동시에 고려하면 청년정책연구 분야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여성', '창업', '가구',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청년정책연구가 청년의 고용 및 일자리,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여성과 창업,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잠재 토픽 수 결정

LDA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은 토픽의 추출 방법이 명료하고, 분석 결과의 재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객관성이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문서군에서 도출할 토픽의 개수를 연구자가 직접 설정해야 한다. 토픽 문서군에 잠재된 토픽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토픽의 수를 가정하고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뒤, 토픽이 분류하는 단어의 정확도에 따라 토픽의 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Arun et al., 2010; Cao et al., 2009; Deveaud, SanJuan, & Bellot, 2014; Griffiths & Steyvers, 2004).

〈그림 IV-7〉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된 방식으로 청년정책연구 보고서의 적정 토픽 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가능한 토픽 수별로 총 네 가지의 지표를 활용했으며, 그림 상단의 두 개 지표는 수치가 낮을 때, 하단의 두 개 지표는 그 수치가 높을 때 각각 모형의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토픽 수를 산출할 때 모형 적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각각의 지표들은 각기 다른 수의 토픽을 제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토픽수 결정을 위한 여러 결과를 바탕으로 20~25개의 토픽을 추출하고, 각각의 분석결과에 대한 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적정 토픽 수를 23개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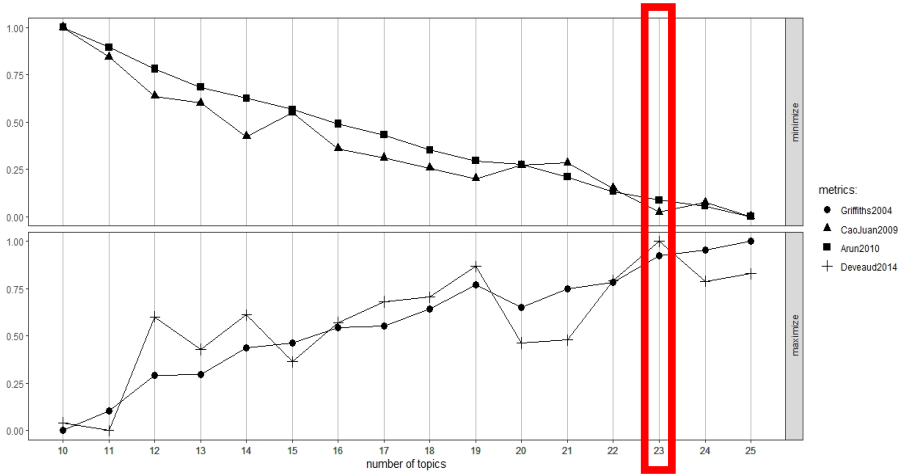


그림 IV-7. 적정 토픽 수 도출을 위한 분석 결과

(3) 토픽모델링 결과

〈표 IV-4〉에서 〈표 IV-7〉은 LDA 분석 결과로 도출된 23개의 토픽과 개별 토픽이 담고 있는 속성을 유추할 수 있는 상위 15개 키워드, 그리고 각 토픽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다섯 편을 연구별로 계산된 토픽 분류 확률에 근거해 제시한 결과이다. 각각의 토픽명은 추출된 키워드와 각 토픽을 대표하는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자 간 협의를 거쳐 명명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확정하였다. 각 토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IV-4〉에서 지원 체계 구축 토픽은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초 연구들이 분류되었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복지’, ‘서비스’, ‘지원’, ‘제공’과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정책의 성격과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단어들이 나타났으며, ‘공공’, ‘입법’, ‘제도’, ‘비영리’와 같이 청년 관련 법령과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화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도 나타났다. 대표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체계 속에 청년을 포함하는 논의 등

개별 정책의 적용이나 합리화, 혹은 종합적 대책이나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지역사회 일자리 토픽은 ‘지역’과 ‘일자리’, ‘고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이 분류되었다. 특히 제주, 부산, 경남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대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고용 활성화나, 청년유입,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이주 토픽은 한국 청년의 해외 진출 또는 재외동포의 국내 진출에 관련한 내용과 국내의 다문화 가정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방안들이 동시에 함께 분류된 것이 특징이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와 같이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의미하는 단어와 함께, ‘이민’, ‘외국인’, ‘통합’, ‘디아스포라’, ‘다문화’와 같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주요 연구 역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재외동포 청년인재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구축방안이나 해운·물류 산업 기반의 해외 진출 방안 연구, 국내의 이민 및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이 동시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와 관련한 청년정책 연구들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키워드의 유사성이 높아 각각의 토픽으로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족구조 변화 토픽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청년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분류되었다. 키워드를 살펴보면 ‘(1인) 가구’, ‘가족’, ‘출산’, ‘결혼’과 같이 청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가족구조 문제를 의미하는 단어들과 함께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고 있었으며, ‘소득’, ‘지원’과 같은 경제적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대표 연구들을 살펴보면 1인 가구와 결혼 및 출산,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등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가족의 형성 등과 같이 청년층이 이행기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토픽 분류 결과(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I

토픽	상위 15 단어	대표 연구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복지, 고용, 보장, 연령, 기준, 제도, 공공, 아동, 입법, 지원, 분야, 장애, 비영리, 제공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지원 연구
		사회서비스일자리 통계 활용방안 연구
지역사회 일자리	지역, 일자리, 고용, 창출, 산업, 인구, 경제, 제주, 실업, 지원, 현황, 부산, 전국, 경남, 인력	영남권 청년 일자리 현황 및 고용확대 과제
		인천시 관광분야 청년고용 활성화 연구 용역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청년유입 특별법 연구
		청년친화도시 부산을 위한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방안
		대구경북지역 청년층 고용구조와 일자리 확대 방안
이주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 동포, 이민, 외국인, 한국, 통합, 아동, 제외, 포용, 디아스포라, 배경, 구축, 다문화	글로벌 코리안 인재의 개발 활용을 위한 네트워킹 방안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가족구조 변화	가구, 여성, 가족, 출산, 결혼, 자녀, 경제, 지원, 증가, 부모, 연령, 세대, 소득, 남성, 저출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제주지역 2030 미혼청년의 결혼·출산의향과 정책 대응방안
		강원도 청년 일 결혼 출산 조사
		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
인구구조 변화	기업, 인력, 고용, 채용, 구조, 조직, 갑축, 중소기업, 관계, 비중, 근로자, 연령, 임금, 제도, 기관	청년층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구조의 적정성 확보 방안
		청년층 고용정책의 문화 미스매치 해소방안 연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수준과 정책방향
		연령차별 실태 및 해소방안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
창업 활성화	기업, 지원, 기술, 활성화, 혁신, 생태, 투자, 산업, 벤처, 창출, 기업가, 스타트업, 조성, 분야, 육성	청년 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방안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방안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창업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용역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여성의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인구구조 변화 토픽의 경우에는 ‘기업’과 ‘인력’, ‘고용’ 및 ‘채용’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표 연구들의 경우 청년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인력구조 문제나 임금 피크제, 고령자의 고용연장 문제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고용 문제와 연계된 연구들이 분류되었다.

창업 활성화 토픽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투자’, ‘벤처’, ‘스타트업’, ‘기업가’와 같은 청년 창업과 관련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 ‘혁신’과 같이 기술 중심의 단어들도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년 창업 정책의 방향성이 기술 중심의 혁신 벤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방안과 같이 전통적 산업 관련 창업 정책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대다수의 창업 활성화 연구들의 경우 혁신이나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기술 중심의 벤처 창업 연구들이 주를 이루면서, 이에 따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IV-5>의 주거 토픽은 청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분류되었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주택’, ‘주거’, ‘가구’와 같이 주거와 관련된 단어들이 ‘임대’, ‘지원’, ‘공급’, ‘입주’와 같은 정책 키워드들과 동시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대’, ‘공공’, ‘공유’와 같은 키워드들을 통해 청년 주거 연구가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표 연구들 역시 공공주택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 공유 주택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1인 가구, 저출산, 지역사회 인구 유입과 같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가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대학생 진로지원 토픽은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면서 청년층을 대표하는 집단인 대학생들이 진로를 개발하거나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된 연구들이 분류되었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학생’과 같이 교육과정 속에 있는 청년이 대상이며 ‘진로’, ‘역량’, ‘개발’ 키워드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 연구로는 청소년 역량지수나 생애 능력 측정과 같은 인적 역량을 거시적 수준에서 측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진로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들과 직업의식 및 윤리, 진로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보고서가 포함되었다.

직업능력개발 토픽은 대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으로 개별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앞선 대학생 진로지원 토픽과 구분된다. 주요 키워드에서 '직업', '훈련', '교육', '능력', '개발'과 같이 직업능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를 확인한다. 대표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사업과 관련한 연구와 전문 인력양성과 같은 특정 직업군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형성 토픽은 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키워드를 살펴보면 '자산', '부채', '연금', '금융'과 같이 금융 관련 키워드들이 나타났으며, '통장', '지원', '장려금', '공제'와 같이 청년자산형성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었다. 관련 연구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행된 저소득 근로 청년 대상 지원 사업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모형 개발, 만족도, 성과 분석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노동 취약계층 토픽은 근로 지위나 조건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청년 노동자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와 같이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노동자나 '미취업' 및 '이직' 상태에 있는 청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대표 연구를 살펴보면 지식산업 청년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환경 또는 근로 조건 등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거나,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취약성에 주목하는 내용의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표 IV-5. 토픽 분류 결과(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II

토픽	상위 15 단어	대표 연구
주거	주택, 주거, 임대, 가구, 공유, 지원, 공공, 공급, 거주, 신혼, 부부, 입주, 지역, 대상, 공간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개선방안
		경상북도 인구유입을 위한 청년 공유주택 도입 연구
		대전시 청년임대주택 소요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학생 진로지원	진로, 청소년, 능력, 역량, 개발, 생애, 안전, 문항, 대상, 지도, 의식, 대학생, 경험, 생활, 학교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II)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4)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생애능력 함양을 위한 실업교육 체제의 현황과 과제
직업능력 개발	직업, 훈련, 개발, 교육, 능력, 기관, 자원, 인력, 산업, 직업훈련, 근로자, 과정, 시장, 참여, 정보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선방안 :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개선방안 연구
		직업능력개발 관련 통계 활용 및 개선 방안
		직업능력개발 우수 훈련기관 연구(1)
자산형성	사업, 참여, 통장, 자산, 부채, 지원, 장려금, 효과, 연금, 금융, 저축, 복지, 대출, 지원금, 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2019~202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성과분석 : 1차 만기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효과성 분석 연구
		자산형성지원제도 환수해지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보고서
노동 취약계층	노동, 이직,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기간,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행, 미취업, 확률, 근로, 사유, 보호, 노동자	구로공단 노동자의 일과 삶에 관한 연구 : 첨단지식 산업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비자발적 이직자의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
		2018년 성남시 빅데이터 분석 영역
		서비스 소업종의 저임금과 근로조건 조사와 분석
여성 취업	여성, 취업, 고용, 노동, 일자리, 경력, 시장, 졸업, 경험, 직업, 임금, 직장, 대학, 전공, 대출자	대출 청년층 노동시장 정착화 과정에 관한 장기 추적 연구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략개발(III) : 성별 전공분리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숙련 불일치와 직장이동
		전라북도 청년여성의 취업준비 실태 및 정책 지원 방안
		부산지역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여성 취업 토픽에서는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요 키워드로 ‘여성’ 이외에 ‘취업’, ‘고용’, ‘노동’, ‘일자리’와 같은 노동 관련 키워드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점은 이를 확인한다. 대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에 주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 격차의 해소에 관심을 두거나, 비수도권 지역 청년여성의 취업 및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분류되고 있었다.

다음 <표 IV-6>의 사회갈등 해소 토픽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분류되고 있었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갈등’과 ‘통합’, ‘포용’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세대’, ‘경로’, ‘노인’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의 중심축이 세대갈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된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역시 세대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의 관리나 세대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체계화 및 내실화 토픽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내실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운영’, ‘평가’, ‘개선’, ‘제도’, ‘프로그램’, ‘강화’와 같은 단어들이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었으며, 연구내용에서도 일자리 및 고용 등과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 제고 방안, 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 방안, 사업 내실화 방안 등 청년을 대상을 하는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 청년 대상 정책이 일자리와 고용에 집중되었던 까닭에 분류된 연구의 대부분이 해당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화, 건강, 안전 토픽의 경우 청년세대 관련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연구들이 분류되었다. 주요 키워드에서 ‘예술’, ‘예술인’과 같은 문화 키워드와, ‘건강’ 키워드, 그리고 ‘여성’, ‘평등’, ‘양성’과 같은 ‘젠더’ 키워드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간’, ‘지역’, ‘커뮤니티’와 같은 공간 중심의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문화 및 건강, 안전 관련 정책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문화의 확산, 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나 청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 토픽 분류 결과(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III

토픽	상위 15 단어	대표 연구
사회갈등 해소	세대, 갈등, 통합, 국민, 미래, 인식, 정치, 제도, 한국, 경로, 우대, 포용, 문화, 노인, 정보	서울시 세대통합 실행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세대간 통합 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정책 체계화· 내실화	지원, 사업, 운영, 추진, 체계, 평가, 활용, 개선, 대상, 센터, 제도, 지역, 프로그램, 기관, 강화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강화를 위한 청년센터 운영사업 성과평가 운영방안 마련
		청년일자리정책 수요자 현장의견 수렴 및 대안 제시
		청년고용정책 수요자에 대한 체감분석 및 대안 연구
		고용보조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편 방안 연구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성과 평가 분석 및 개편방안 마련
문화, 건강, 안전	문화, 여성, 공간, 건강, 평등, 활동, 커뮤니티, 지역, 목표, 예술, 분야, 양성, 예술인, 젠더, 영역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2017 서울시민 문화생활 리포트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역량강화 방안
		생애건강지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청년 질병예방 연구용역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경제, 변화, 국가, 노동, 한국, 시장, 방향, 가능, 정부, 구조, 제시, 중요, 자원, 산업, 지속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2-2010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1)
		노동이해대변의 다양화와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과정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EU의 고용시장 변화와 VET 제도 선진화 전략
노동시장 미스매치	기업, 취업, 중소기업, 대학, 현장, 인력, 협력, 인턴, 산학, 채용, 실습, 미스매치, 산업, 효과, 참여	중소기업경력자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촉진 방안 연구용역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의 구조와 성과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산학연계시스템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연구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와 지역대학의 역할

토픽	상위 15 단어	대표 연구
교육과 인재양성	교육, 대학, 학교, 학습, 학생, 직업, 평생, 고등교육, 체제, 과정, 전문, 능력, 졸업, 단계, 중심	한국교육의 국제적 좌표와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연구
		인재강국 건설을 위한 교육선진화 개혁방향 연구
		대학입학제도의 운영 실상과 영향 분석 연구
		대학기반 성인여성 인재양성 기능 강화 방안
		미래사회의 교육양식과 평가체제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토픽은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격변 속에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경제’, ‘시장’, ‘산업’과 같은 경제 관련 단어들이 ‘변화’, ‘방향’, ‘제시’, ‘지속’과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의미하는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과학기술의 진보,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가 노동시장, 특히 청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해외 제도 검토를 통해 변화 대응의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토픽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불일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대학’, ‘현장’, ‘인턴’과 같이 청년이 취업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미스매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른 인력수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와 관련한 내용과 개인 수준에서 역량과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현상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교육과 인재양성 토픽은 다수의 청년이 소속되는 단계인 대학(고등교육)을 사회구조 속에서 인재양성 기관으로 보고, 그와 같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대학’, ‘학교’, ‘고등교육’과 같이 기관을 의미하는 단어와 ‘과정’, ‘졸업’, ‘단계’와 같이 교육을

과정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였다. 여기에 ‘직업’, ‘전문’, ‘능력’ 등과 같은 단어를 통해 이 토픽에 분류된 연구들이 주요하게 다루는 교육 내용이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연구들은 대학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다루거나, 교육 개혁, 평가체제 개편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변화를 추구하는 배경이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나 인재양성 등과 같이 사회체제의 효과적 운영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표 IV-7>에서 국제협력 및 사례 토픽의 경우에는 청년 참여가 중심이 된 국제협력 사례와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주로 분류되었다.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과학’, ‘기술’, ‘환경’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경교육과 관련해 청년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참여를 이끌어 낸 국제협력 사례나, 여성인력 양성,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 토픽에서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실업, 이직과 관련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고용’, ‘노동’, ‘시장’, ‘실업’, ‘일자리’, ‘취업’과 같은 노동시장과 관련한 단어들에 ‘증가’ 혹은 ‘감소’와 같은 단어들도 함께 사용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대표 연구들 역시 경제위기 상황에 나타나는 실업 및 고용문제, 취약계층의 취업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현금성 취업지원 토픽은 청년의 경제활동을 위한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분류되었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지원’, ‘구직’, ‘지원금’, ‘수당’과 같이 구직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암시하는 단어들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서울’ 및 ‘지방’과 같은 키워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과 관련한 기초 연구 및 효과성 연구 등과 청년구직지원금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경기도의 청년지원 사업 도입과 그 효과성 측정 등에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이 토픽을 구성하고 있었다.

표 IV-7. 토픽 분류 결과(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IV

토픽	상위 15 단어	대표 연구
국제협력 및 사례	과학, 중국, 기술, 협력, 환경, 정부, 기술인, 국가, 한국, 발전, 교육, 운영, 양국, 혁신, 분야	2018년 한중일 환경교육 협력사업 운영 및 사례 연구(2015~2018)
		2014년 환경장관회의 (TEMM) 청년포럼 운영 및 공동 환경교재 개발 연구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연구 및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2014)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	고용, 노동, 시장, 실업, 증가, 일자리, 계층, 근로, 소득, 임금, 취약, 취업, 감소, 제도, 변화	IMF 금융지원 이후 실업문제에 관한 법적 대응 - 영국을 중심으로 -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고용변화와 향후 과제
		경제위기와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규모추이와 일자리이동 분석 및 취약계층 취업촉진 정책방안 연구
현금성 취업지원	활동, 참여, 지원, 사업, 구직, 서울, 프로그램, 경험, 수당, 시간, 지원금, 센터, 심리, 준비, 지방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효과성) 분석 연구(2017~2019)
		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한 FGI 연구
		활력프로그램 참여자 사업 전후 변화양상 연구 - 진로정서 자기진단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형 갭이어 지원방안 기초연구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
기본소득	기본소득, 경기도, 소득, 배당, 효과, 제도, 지역, 도입, 기본, 지급, 보장, 복지, 수급, 경제, 화폐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충남 청년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방향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효과 검증 목표로 청년층 대상 증거기반 과학적 정책실험 설계
농산어촌 활성화	농업, 농촌, 도시, 어촌, 지역, 귀농, 귀촌, 농산어촌, 인구, 공간, 마을, 사업, 육성, 추진, 분야	청년 농촌보급자리사업 계획 수립 용역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
		어촌지역 사회경제변화 장기추적 조사체계 연구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실천농장 운영을 통한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전략

기본소득 토픽의 경우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한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하나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배당’, ‘지급’, ‘수급’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한다는 점은 현금성 취업지원 토픽과 유사한 형태이나, ‘경제’나 ‘화폐’와 같이 경제적 측면의 키워드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대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도나 서울시, 충남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된 청년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실행방안이나 정책실험에 관련된 연구들이 분류되었다.

농산어촌 활성화 토픽은 귀농 및 귀촌을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농업’, ‘농촌’, ‘어촌’, ‘농산어촌’, ‘마을’과 같은 지방지역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동시에 ‘귀농’, ‘귀촌’과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면서 청년세대의 귀농을 지원하는 정책 연구들이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 연구들 역시 농촌보급자리사업이나 연안형 도시재생,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실천농장 등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농산어촌 지원사업 연구가 분류되고 있었다.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주제 분류

다음의 <표 IV-8>에서 <표 IV-11>까지는 LDA 분석 결과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대응시켜 정리한 것이다. 연구진 논의를 통해 분류한 결과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다. 연구 주제의 특성상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과제의 관련성과 주요 키워드 간 상관성 등을 고려해 분류하였다. 이는 분류방식 및 체계에 따라 분야별 연구 수행의 정도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야별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와 같은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표 IV-8>에서 지원체계 구축 토픽은 청년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참여·권리 분야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년 관련 법적 연령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을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편입하기 위한 근거 기반 구축과 관련한 내용은 참여·권리 분야에 해당하는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내실화’ 과제와 연결된다. 세부과제 가운데에서는 ‘청년정책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청년관련 법령 체계화’의 추진에 이 토픽에 해당하는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표 IV-8.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LDA 분석 결과 분류 I

LDA 분석 결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분류	세부과제
지원체계 구축	참여·권리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2-1.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지역사회 일자리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교육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3.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3.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이주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복지·문화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참여·권리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4-2.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가족구조 변화	일자리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4-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복지·문화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4-1.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창업 활성화	일자리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2-1. 청년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복지·문화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4-1.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 혁신을 응원 4-3.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지역사회 일자리 토픽의 경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류체계에서 일자리와 교육 정책의 연관성이 보인다.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역사회 일자리 토픽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된 청년 고용 활성화 및 청년유입과 관련한 내용의 연구는 일자리 분야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일자리 토픽은 교육 분야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나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과제와도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 일자리 토픽으로 분류된 연구 내용의 주된 초점이 학교-일자리라기보다 고용·일자리 창출에 가까워 이 연구에서는 해당 토픽을 일자리로 분류하였다.

이주 토픽의 경우 일자리 및 복지·문화, 참여·권리 청년정책과 관련이 깊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한 가지로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토픽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복지·문화 정책의 경우 청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주배경 청년 지원’ 정책이 있으며, 참여·권리 정책의 경우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이 있어 그 연관성이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 토픽에 해당하는 연구 중 일부가 청년의 해외 진출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국내로의 이주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연구가 다수라는 점과 향후 관련된 주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복지·문화 분야로 분류하였다.

가족구조 변화 토픽은 일자리 정책 및 복지·문화 정책과 연관성이 있었다. 먼저, 일자리 과제 중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은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문화 분야에서 다루는 과제의 경우 더욱 직접적으로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토픽을 복지·문화로 분류하였다. 특히,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정책이나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과 관련해 진행된 선행 연구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 마련 및 추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 토픽에서는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다루고, 해결방안으로 고용정책 다변화, 고용문화 개선, 정년 연장 등에 관해 논의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을 강조하며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구구조 변화 토픽과 일정 부분 연관성을 보인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상생 문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정년 연장이 청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 수행된 연구의 검토를 통해 보완될 수 있지만, 청년층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향후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 활성화 토픽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일자리와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발굴, 교육 및 사업화, 자금 공급, 재창업 지원 등에 걸친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갖춘은 물론 기술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전통문화 및 시장, 게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 활성화 토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복지·문화 분야에서도 문체부의 ‘청년 콘텐츠 기업 모험투자펀드’ 정책이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기준 완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 ‘1인 광고콘텐츠 및 청년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청년 창업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문화에서는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삶 속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창업 활성화 토픽을 일자리 분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표 IV-9>에서 주거 토픽은 주거 분야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면서 복지·문화 정책의 일부와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1인 가구, 임대주택, 공유주택, 주거환경개선 등과 관련해 수행된 선행연구는 세부 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복지·문화영역에서 시행되는 ‘보호종료 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정책 역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주거 토픽으로 분류된 연구에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주거 토픽을 주거 분야로 분류해 후속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IV-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LDA 분석 결과 분류 II

LDA 분석 결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분류	세부과제
주거	주거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4.3만호 공급 1-2. 대학기숙사 확충(3만명) 및 기숙사비 경감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2-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3-1.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3-2.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4-1.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4-2.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4-3.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4-4.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
	복지·문화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대학생 진로지원	교육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2-1. 혁신공유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3.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LDA 분석 결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분류	세부과제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교육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2. 대학 미진학 청년의 교육비 지원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2-2.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1.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4-2.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자산형성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2.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복지·문화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 1-2. 청년 부채부담 경감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3-1.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3-2. 청년 노동권의 보장
	복지·문화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3-4. 빈곤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대
	참여·권리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4-1.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여성 취업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3-2. 청년 노동권의 보장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4-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대학생 진로지원 토픽은 청년의 대표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다수 포함한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 정책과 관련성이 두드러졌다. 대학생 진로지원 토픽과 연관성이 높은 정책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취업준비생 및 직업

전환자 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진로를 지원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교육 분야 정책의 대부분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토픽의 경우 노동시장 진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한 훈련 또는 학습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자리 및 교육 분야와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먼저, 일자리 분야 정책을 살펴보면 내일배움카드나 인턴 및 훈련 지원 등으로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를 도모하고 있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와 같이 비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들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에 걸쳐 해당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및 진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직업능력개발 토픽은 두 분야 모두와 연관성을 보이지만,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 토픽을 교육 분야로 분류하였다.

자산형성 토픽의 경우 일자리 및 복지·문화 정책과 연관성이 깊었다.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는 일자리 분야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경우 자산형성 토픽으로 분류된 연구에서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지·문화 정책에서도 '청년희망계좌 통합 및 운영개선',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사업과 같이 목돈 마련 지원정책이나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와 같은 금융정책이 자산형성 토픽과 연결될 수 있으나, 기존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산형성 토픽을 일자리 분야로 구분하였다.

노동 취약계층 토픽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일자리 분야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지만, 주제의 특성상 복지·문화를 비롯해 참여·권리 분야와도 관련이 있었다. 먼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일하는 청년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노동 권익을 보장하는 일자리 정책은 근로 지위나 조건이 불안정한 청년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노동 취약계층 토픽 연구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도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세부과제에서 노동 취약계층 지원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권리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 근로인센터 운영’,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운영’ 정책 역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해당하여 이 토픽과 유사성이 드러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노동 취약계층 토픽에 포함되는 연구의 다수가 배경적 취약성보다 업무 환경 또는 근로 조건 등에서의 취약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로 분류하고 후속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성 취업 토픽의 경우 일자리와 연관성이 두드러졌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여성 역량 강화’,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출산·육아 참여권리 보장’ 등과 같이 청년여성의 취업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 취업 토픽 역시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IV-10>에서 사회갈등 해소 토픽은 세대 및 국민통합 방안을 다루는 연구를 포함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과제로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참여·권리 분야에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전반에 청년 참여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세대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갈등해소를 위해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 청년참여 강화’, ‘주거 정책 결정기구 청년참여 확대’ 등이 있었으며, ‘청년공동체 활성화’나 ‘지역별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과 같이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들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갈등 해소 토픽을 참여·권리 분야 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정책 체계화 및 내실화 토픽의 경우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들을 포함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모든 분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과제가 일정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이 토픽을 기본계획 상의

특정 영역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해당 토픽으로 분류된 연구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분류함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체계화 및 내실화 토픽에 해당하는 연구 중 일부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여·권리 영역으로 분류할 여지가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작아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반면, 상위 15개 단어 외에 ‘고용’, ‘취업’, ‘일자리’와 같은 키워드가 다수의 연구에서 출현하고 있다는 점은 이 토픽이 일자리 분야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가리킨다. 과거 청년 대상 정책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고용에 집중되었던 까닭에 사업을 평가하고 내실화하는 연구가 분류된 토픽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한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체계화 및 내실화 토픽을 일자리 분야로 분류하였다.

문화, 건강, 안전 토픽은 복지·문화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청년 국민건강 검진 무료 실시’와 같은 신체건강과 더불어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확대/강화’ 정책과 같은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와 관련해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지원’,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과 같이 청년 예술가를 위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사회 첫걸음 문화누리카드’, ‘생활 속 문화시설 확대’ 정책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건강, 안전 토픽과의 개연성이 돋보인다.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토픽은 청년층의 일자리에 과학기술 진보나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 변화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통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 IV-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LDA 분석 결과 분류 III

LDA 분석 결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분류	세부과제
사회갈등 해소	참여·권리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1-1.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1-2.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2-1.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2-3.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3-1.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3-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정책 체계화 · 내실화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참여·권리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2-1.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3-1.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문화, 건강, 안전	복지·문화	2. 청년 건강 증진 2-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2-2.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4-1.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 혁신을 응원 4-2.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4-3.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4-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교육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2-2.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교육과 인재양성	교육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3.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2-2.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3-3.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노동시장 미스매치 토픽은 교육 분야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업,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서 인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과 개인의 역량과 요구되는 역량이 불일치하는 현상 등이 주된 연구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나 청년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및 리더 양성', 'SW마에스트로 과정',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과 같은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정책과 함께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와 같이 교육-일자리 연계형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 인재양성 토픽은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와 관련한 과제의 경우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다수 포함하며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소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인재양성 토픽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다만, 이 토픽으로 분류된 기존 연구는 대다수가 고학력화나 대학 서열화와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 IV-11>에서 국제협력 및 사례 토픽은 청년 참여를 중심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참여·권리 분야와 연관성이 높았다. 또한 '글로벌 청년 기후변화 해커톤', '한·아세안 청년 서밋',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 사업은 환경교육 협력 사업 운영 사례 등과 같은 기존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 토픽은 일자리 분야와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역량 제고 지원 방안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산업구조와 경제 상황의 변화 등에 의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분류된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층 고용 약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연구 내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청년정책 기본계획상

에서는 해당 내용보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역량 강화와 공공기관 일자리 확보 등과 같은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소 간극을 보인다.

표 IV-1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LDA 분석 결과 분류 IV

LDA 분석 결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분류	세부과제
국제협력 및 사례	참여·권리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4-2.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현금성 취업지원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기본소득	복지·문화	-
농산어촌 활성화	일자리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주거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4.3만호 공급

현금성 취업지원 토픽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의 직접 대응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현금성 취업지원 사업의 취지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거나 취업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구직 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 그 유사성이 높다.

기본소득 토픽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이나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의 효과 또는 실행방안 등을 다루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세부과제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기본소득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산어촌 활성화 토픽은 주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분야별 창업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관련 세부과제에서 청년농업·어업인 정착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청년을 위한 임대농장 운영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정책이 계획되어 있는 등 귀농 및 귀촌을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연구가 포함된 농산어촌 활성화 토픽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 정책으로 다루어지는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도 관련성이 높지만, 일자리 영역에서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을 더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 토픽을 일자리 분야로 분류해 후속 분석을 진행하였다.

토픽 분류 결과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분류 기준으로 대응시킨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그 결과 일자리 분야에 해당하는 토픽은 총 11개로 '지역사회와 일자리', '인구구조 변화', '창업 활성화', '자산형성', '노동 취약계층', '여성 취업', '정책 체계화·내실화',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 '현금성 취업지원', '농산어촌 활성화'가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 일자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에서의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도 일부 다루고 있었으며, '창업 활성화'와 '자산형성'의 경우 복지·문화 분야의 계획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정책 체계화·내실화'는 주제의 특성상 모든 영역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일자리 외에도 참여·권리 분야에서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활성화'의 경우 주거 분야와 관련성을 다소 포함하고 있었으며, '노동 취약계층' 토픽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문화와 참여·권리에서도 관련한 계획이 일부 존재하는 등 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주거 분야에 해당하는 토픽은 '주거' 한 가지에 불과했다. '주거'와 관련한 내용은 복지·문화 영역에서도 일부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교육 분야에 속하는 토픽은 '대학생 진로지원'과 '직업능력 개발', '노동시장

미스매치’, ‘교육과 인재양성’으로 총 4개의 토픽이 분류되었다. 한편, 복지·문화 분야에는 ‘이주’, ‘가족구조 변화’, ‘문화, 건강, 안전’, ‘기본소득’ 등 총 4개에 해당하는 토픽이 분류되었다. 이 중 ‘이주’ 토픽의 경우 일자리와 참여·권리 분야와도 관련성이 있어 융합적 성격을 보였고, ‘가족구조 변화’와 관련한 내용도 일자리 분야에서 일부 다뤄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토픽은 ‘지원체계 구축’, ‘사회갈등 해소’, ‘국제협력 사례’였다.

표 IV-12. 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 분류 결과

분류	LDA 분석 결과	비고(관련 영역)
일자리	지역사회 일자리	교육
	인구구조 변화	
	창업 활성화	복지·문화
	자산형성	복지·문화
	노동 취약계층	복지·문화, 참여·권리
	여성 취업	
	정책 체계화·내실화	참여·권리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	
	현금성 취업지원	
주거	농산어촌 활성화	주거
	주거	복지·문화
교육	대학생 진로지원	
	직업능력개발	
	노동시장 미스매치	
	교육과 인재양성	
복지·문화	이주	일자리, 참여·권리
	가족구조 변화	일자리
	문화, 건강, 안전	
	기본소득	
참여·권리	지원체계 구축	
	사회갈등 해소	
	국제협력 및 사례	

※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 연구 동향을 탐구할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 해당할 수 있는 토픽도 세부과제에서의 관련성과 주요 키워드 간 상관성 등을 고려해 특정한 하나의 분야로 분류하였으므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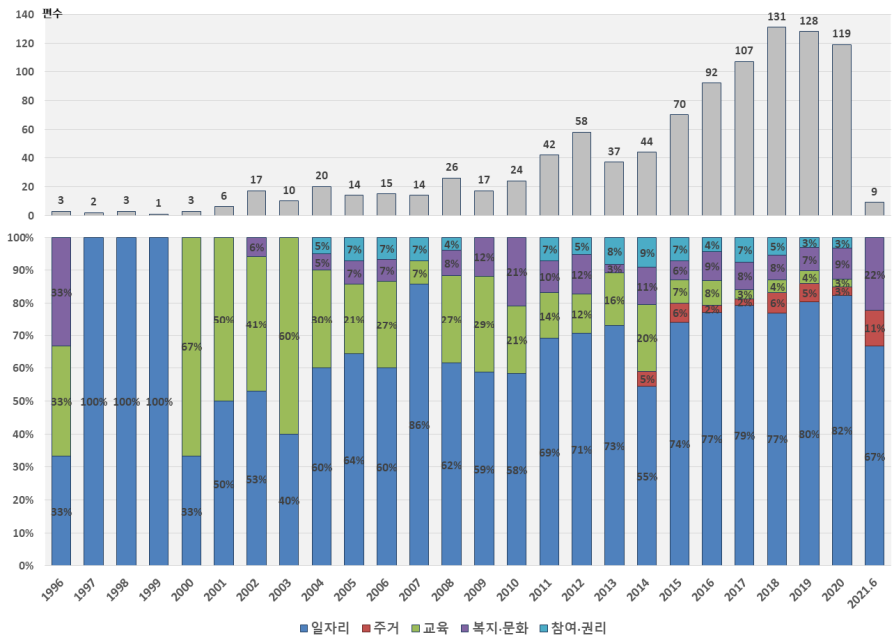
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분석은 앞서 분류한 체계를 바탕으로 분야에 따른 연구 수행 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이후 분야별로 시기(정권 집권 기준)에 따라 세부주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 청년정책연구 주제 변화

〈그림 IV-8〉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대분류를 중심으로 구분한 주요 토픽을 바탕으로 연도별 연구 수행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일자리 연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청년의 일자리 관련 연구로 나타났지만, 2001년 교육 분야 연구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 연구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1년까지는 연도별로 수행된 연구의 편수가 최대 6편(2001년)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아 비중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청년정책연구는 2002년에 들어서며 그 이전보다 연구 수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까지는 일자리와 교육 분야 위주로 연구 주제가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7년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청년연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소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는 청년정책연구 분야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행되는 연구의 수가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치며, 이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일자리 관련 연구는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2010년대 이후에도 전체 대비 평균 70% 이상의 연구 비중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제목 : 비중(%), 연도

그림 IV-8. 분야별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청년의 복지·문화와 참여·권리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적은 수지만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유형(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을 이 분야로 분류해 결과에 적용할 경우, 그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주거와 관련된 연구는 2014년 처음 시작된 이후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2021년 6월 기준으로 완료된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거 영역이 청년정책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청년층이 겪는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2) 분야별 세부 주제 변화

(1) 일자리 분야

〈그림 IV-9〉는 현재까지 실시된 청년정책연구들 중 일자리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이전 57.1%이던 일자리 정책연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2007년 63.0%, 2008-2012년 66.3%, 2013-2016년 71.5%를 차지하였으며, 2017-2021년에는 전체 청년정책 연구 중 79.8%가 일자리 정책 연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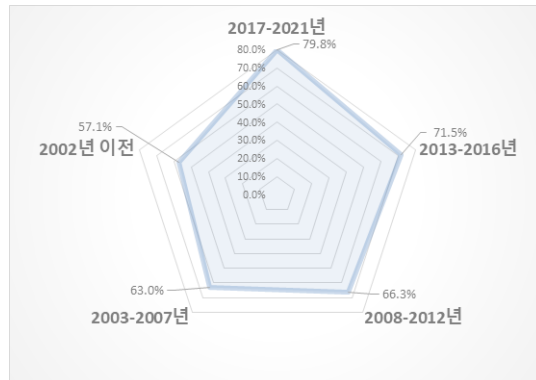


그림 IV-9.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그림 IV-10〉은 일자리와 관련한 청년정책연구들의 비중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연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체 계화 및 내실화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청년 일자리 연구가 사회경제적 영역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측면에서 진행한 반면,

최근에는 그동안 운영한 청년 고용과 일자리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내실화하거나,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현금성 취업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부조 정책의 경우 2002년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으나 2013년 이후 다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본소득 논의 확대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2008년 이후 청년 창업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청년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해석되며, 지역사회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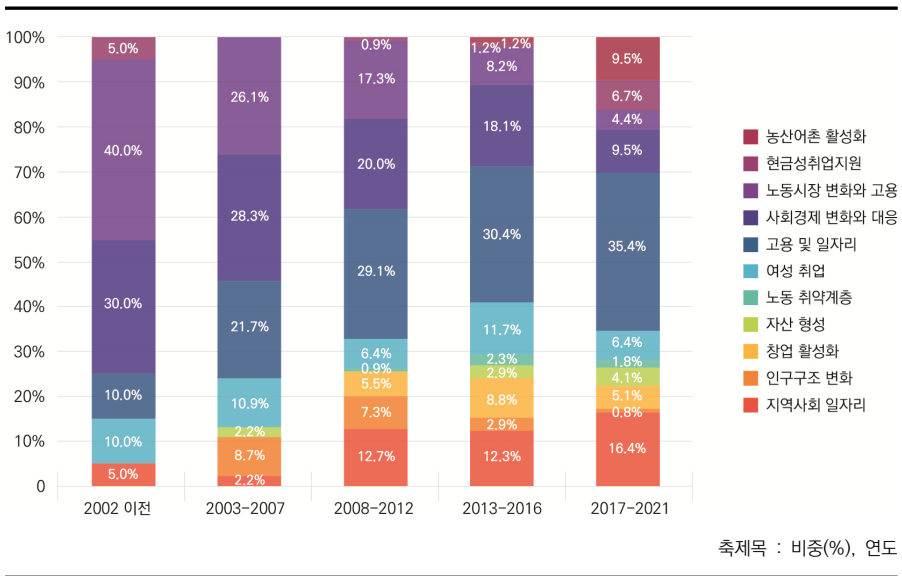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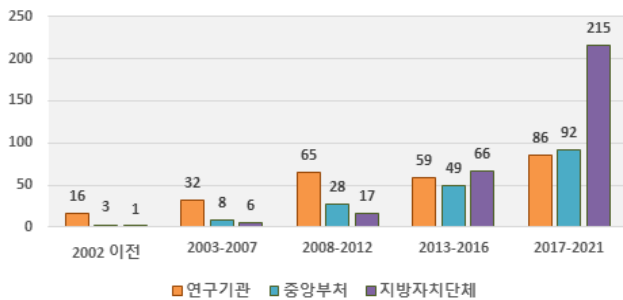


그림 IV-10.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 토픽 비중 변화

<그림 IV-11>을 통해 시기별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 연구 발주기관 현황을 살펴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일자리 연구의 발주기관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3년 이전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전체 연구의 54.7%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서 논의한 창업 및 지역사회 일자리 연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축제목 : 보고서 편수, 연도

그림 IV-11.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2) 주거 분야

〈그림 IV-12〉는 현재까지 실시된 청년정책연구들 중 주거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이전에는 주거와 관련한 연구가 없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청년주거에 관한 연구 비중은 아직 미미하여 2017-2021년 기준 전체 청년 연구의 4.3%(21편)만이 주거 관련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 기준으로 주거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는 24개로 전체 270개 과제의 약 9%에 해당하는데, 관련해 수행되는 연구는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연구 수행 실적과 기본계획 상의 과제 수를 일괄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격차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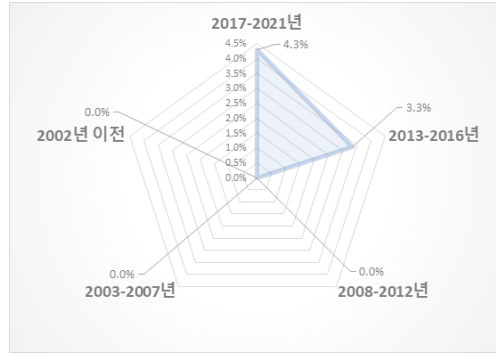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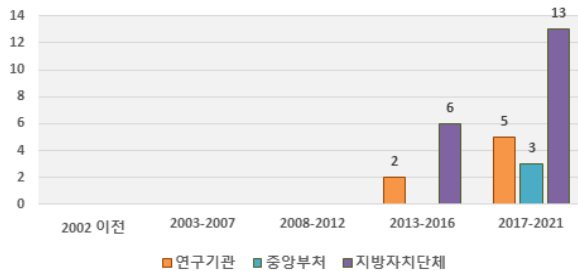


그림 IV-12. 주거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그림 IV-13〉은 시기별 주거 관련 청년정책 연구 현황을 발주기관별로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와 관련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중앙부처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의 수행 정도는 두 기관 유형을 합치더라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제목 : 보고서 편수, 연도

그림 IV-13. 주거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의 도입이나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연구기관과 중앙부처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세어하우스 가이드라인 마련, 최저주거기준 마련,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과 같이 주거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교육 분야

〈그림 IV-14〉는 청년정책연구들 중 교육 관련 정책연구가 차지하는 비율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한 것이다. 2002년 이전 전체 연구 중 37.1%를 차지하던 교육 연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2021년 기간에는 전체 연구의 단 3.1%만이 교육 관련 청년정책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연구의 수행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교육정책 관련 청년 연구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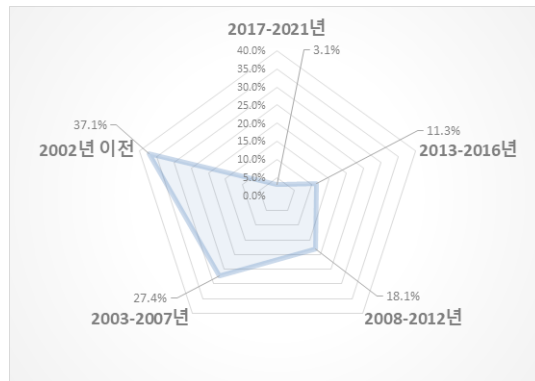


그림 IV-14. 교육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그림 IV-15〉는 교육 관련 청년정책연구들의 비중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교육과 인재양성 토픽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학생 진로지원 토픽의 경우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두 토픽이 대학생이라는 특정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 정책 연구가 교육적 측면에서 취업에 대한 강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토픽의 경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이전 30.8%에서 2017-2021년 6.7%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정책연구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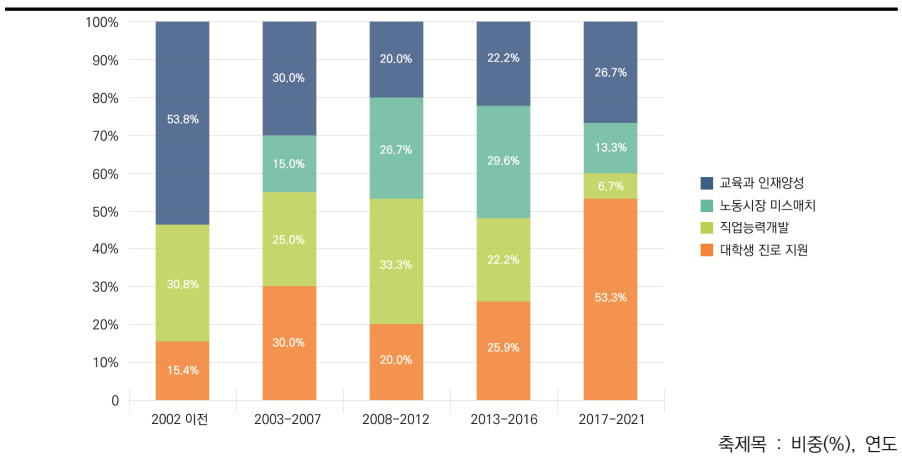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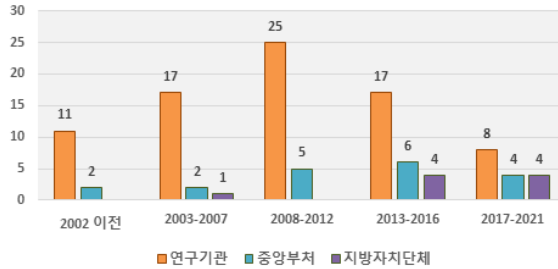


그림 IV-15. 교육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 토픽 비중 변화

시기별 교육 관련 청년정책 연구 발주기관 현황을 제시한 〈그림 IV-16〉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시기에 걸쳐 주요 연구기관이 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기관의 경우 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비교적 지속적으로 수행한 반면 중앙정부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건수만이 수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교육 관련 연구 수행 실적이 특히 적어 연구기관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축제목 : 보고서 편수, 연도

그림 IV-16. 교육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4) 복지·문화 분야

현재까지 실시된 청년정책 연구들 중 복지·문화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림 IV-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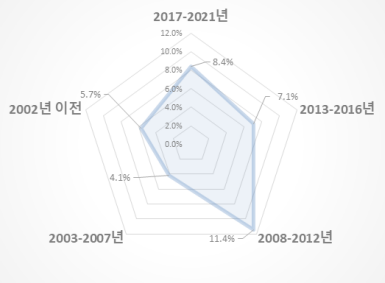


그림 IV-17.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지난 2002년 이전 전체 연구의 5.7%를 차지하던 복지·문화 연구는 이후 증가하여 2008-2012년에는 전체 연구의 11.4%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복지·문화 관련 연구들은 다소 감소하여 2017-2021년 시기에는 전체 연구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복지·문화 관련 청년정책 연구의 토픽별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연구 특성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기를 막론하고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토픽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주제의 경우 다양한 변화를 보였는데 2002년 이전에는 문화·건강·안전 관련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2008-2012년에는 이주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이후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새롭게 등장하며, 복지·문화 분야의 연구 주제를 다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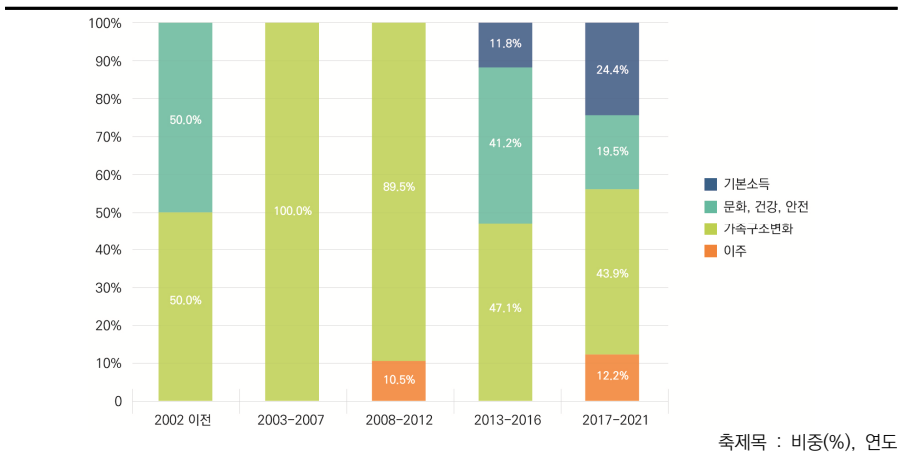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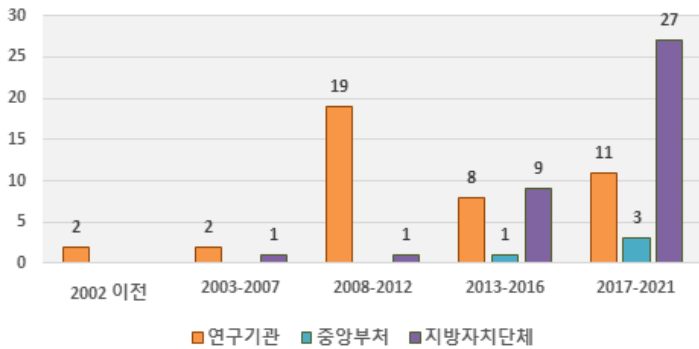


그림 IV-18.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 토픽 비중 변화

시기별 복지·문화 관련 청년 정책 연구 발주기관 현황을 제시한 <그림 IV-19>를 살펴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발주기관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3년

이전의 경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복지·문화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가 크게 증가하여, 2017-2021년에는 전체 연구의 65.9%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축제목 : 보고서 편수, 연도

그림 IV-19.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5) 참여·권리 분야

〈그림 IV-20〉은 현재까지 실시된 청년정책 연구들 중 참여·권리 관련 정책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이전의 경우 참여·권리와 관련된 정책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2003년 이후 전체 연구의 약 5% 내외의 수준에서 관련 연구 수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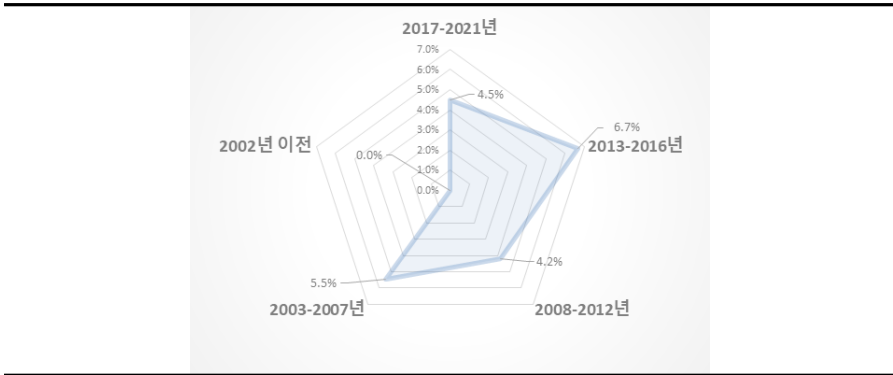


그림 IV-20.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비중 변화

참여·권리 관련 청년정책 연구의 토픽별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한 <그림 IV-21>을 살펴보면 시기를 막론하고 사회갈등 해소가 중요한 토픽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는 2013-2016년 시기에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3년 이후부터 국제 협력 및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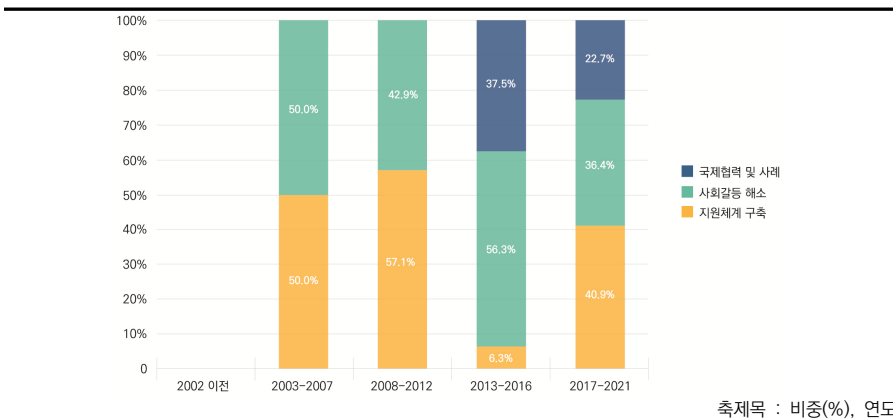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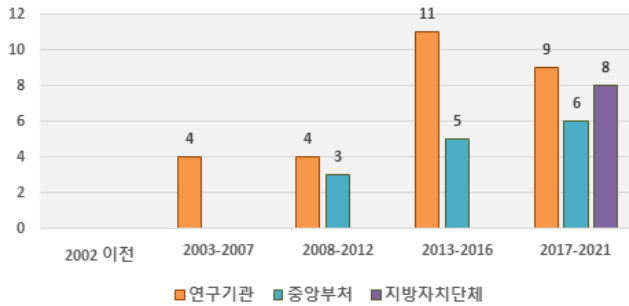


그림 IV-21.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 토픽 비중 변화

마지막으로 <그림 IV-22>은 시기별 참여·권리 연구의 현황을 발주기관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2017년 이전까지 참여·권리연구는 연구기관 및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의 수행 빈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내용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최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층의 의식에 대해 이해하고자 수행한 연구의 증가가 여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축제목 : 보고서 편수, 연도

그림 IV-22.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발주기관 변화

○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 청년정책연구 현안 및 발전방안
- 2. 분야별 청년정책연구 수요

1. 청년정책연구 현안 및 발전방안

1) 연구 수행 격차

이 연구에서 수집한 청년정책연구 자료는 기본계획 수립연구, 실태조사(패널 조사), 일반보고서 형태를 포함해 총 1,165편이었다. 이 중 일반보고서 형태의 자료는 전체 자료의 대부분(91.7%)을 차지했다. 일반보고서 형태의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 수행 실적이 2008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가 462편(4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자체 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387편(36.2%)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부중앙부처가 219편(20.5%)으로 가장 적었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전까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던 경향이 근래 들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수행이 늘어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연구 수행 격차는 크게 연구 주제의 다양성과 수행 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분야별 수행 격차는 다각도로 관찰되었다. 먼저, 중앙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약 40.5%에 해당하는 연구 수행실적을 보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외 청년위원회를

포함한 국무조정실 7.3%,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각 5.9%를 차지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분야에서의 연구 수행 격차를 시사한다. 연구기관별 현황에서도 교육과 일자리 분야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8%로 가장 많은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정책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한국노동연구원도 18.6%를 차지했다. 반면, 복지와 관련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6.3%를 차지해 5대 정책 분야 내에서의 연구 수행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총 23개의 연구 주제 중 11개는 일자리 분야로 구분되었던 것과 비교해, 교육과 복지·문화 분야는 각각 4개, 참여·권리 분야는 3개, 주거 분야는 1개에 불과했으며, 전체 현황에서도 일자리 73.4%, 주거 2.9%, 교육 10.5%, 복지·문화 8.3%, 참여·권리 4.9%로 나타나 분야별로 축적된 연구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예산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표 V-1>는 청년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및 예산과 토픽 분류의 결과에 따른 토픽 수 및 연구수행 실적을 비교해 제시하였다. 일자리 분야 토픽 수(47.8%)와 연구수행 실적(73.4%)은 과제 수(34.8%)나 예산(34.5%)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주거와 교육 분야는 이와 반대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거 분야의 경우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크다는 점과 수집된 자료 외에 전문성 문제로 외부에서 수행된 연구가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이나 과제 수에 비해 그동안 충분히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교육 영역은 정책적 중심이 교육-일자리 연계로 이동해 가며 주제의 다양성이나 연구 수행에서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복지·문화와 참여·권리 영역은 정책과 연구간 괴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작으며, 특히 참여·권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0.3%에 불과하여, 하나의 분류체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1. 분야별 사업, 예산, 연구 주제, 연구 수행 실적 비교

구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정책	기본계획(세부과제 수)	34.8%	8.9%	30.7%	13.7%	11.9%
	시행계획(예산)	34.5%	36.5%	23.8%	4.9%	0.3%
연구	토픽 분류(토픽 수)	47.8%	4.3%	17.4%	17.4%	13.0%
	토픽 분류(연구수행 실적)	73.4%	2.9%	10.5%	8.3%	4.9%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관계기관합동 (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연구진 자체 산출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주제 편중 현상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구 수행 격차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먼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는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증한 연구 수행 영역이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농산어촌 활성화, 임대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지방소멸 관련 이슈와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배당과 같은 기본소득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지역별 연구 수행 정도는 대체로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시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 연구 수행 실적이 두드러지게 많았던 반면, 인천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행 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구 주제의 다양성이나 지속성 등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으며,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 지자체 간 협동 연구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지자체 간 예산이나 인력에 따른 연구 수행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류 체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류 체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세부과제 수, 예산 규모의 차이뿐만 아니라 분야 간 중첩되는 정책과제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제기한

전문가 의견(전문가 C, D, E, G, I)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복지 영역의 경우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다른 영역에서 복지의 성격을 갖는 정책을 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 영역 자체에서는 소득보장이나 건강 관련 정책만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과 일자리의 영역은 청년기 특성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구분이 매우 어려우며, 참여·권리 분야도 청년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와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분류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거나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분류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와 교육과 같이 관계성이 높고, 세부과제도 많은 영역의 경우 두 영역을 교육-일자리로 융합하고, 이행 단계에 따라 과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동시에 복지와 참여·권리같이 청년정책 전반의 기초가 되어야 할 내용을 다루는 영역의 경우 기본 원칙 및 추진 원칙 등과 같은 형태로 담아 정책 수립 이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정 주제나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청년기의 이행기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나 교육, 주거와 같이 이슈 중심의 접근보다 생애사적 관점에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청년 생활세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체계 속에서 세대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성된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되,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분야별 청년정책연구 수요

기존 수행된 청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한 분야별 요청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아래 지역 사회 중심의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국가 사이의 이해 상충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국가 수준에서 지역사회 균형 발전은 청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일자리의 수, 보상의 질, 문화적 환경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괴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전문가 H). 다음으로 여러 정책이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공정'의 개념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개인 및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전문가 B).

주거와 관련해서는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주거 분야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정책과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향후 청년주거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환경적으로는 인구구조 및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1-2인 가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족가구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1-2인 가구 중심으로, 혈연가구 중심에서 비혈연 가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청년과 저출산 정책을 연계한 생애최초 주거문제 대응 전략과 생애 미혼율 증가에 따른 청년주거정책 대응 방안과 같은 연구의 수행이 요청된다(전문가 D). 더불어,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및 저소득청년 주거상향이동과 관련한 연구 역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문가 C).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적절하게 기능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향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며, 그 바탕이 될 생애전반기에 걸친 추적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의 수행이 요청된다(전문가 A). 예컨대, 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들을 새로운 청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등 우수한 청년층 집단을 국내의 우수 인적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 주요국의 산업구조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초한 플랫폼 경제 및 공유 경제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관련 연구의 수행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미스매치나 국제감각과 글로벌역량에 초점을 둔 정책 연구의 추진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전문가 J).

복지·문화 영역에서는 사회계층이 공고화되어감에 따라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결핍과 배제의 영향과 실태, 빈곤가구 청년층의 자립 지원, 정신건강을 포함한 취약청년의 건강 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논의될 수 있다(전문가 E). 아울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적 제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기본소득 제도가 사회 영역 및 집단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연구를 구상할 수 있다(전문가 J).

참여·권리 영역에서는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보고 그 한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무엇이며 활동과정에서 정부 조직과의 갈등이나 협력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사후 평가 성격의 연구와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진 조직을 살피고 이를 검증하는 등 근본적

성격의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전문가 F). 관련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의 실제 활동 여건과 참여 결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책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가 G, I).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청년 참여와 권리에 관한 선행적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관계기관합동 (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배정희, 김기현 (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신동훈, 김세현 (2020).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분석: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탐색. *교육학연구*, 58(1), 333-381.
-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년 6월 20일 검색 및 인출.
- 행정자치부 (2016).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편람*. 세종: 행정자치부
- Arun, R., Suresh, V., Madhavan, C. V., & Murthy, M. N. (2010). On finding the natural number of topics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Some observations. *In Pacific-Asia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391-402.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h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Cao, J., Xia, T., Li, J., Zhang, Y., & Tang, S. (2009). A density-based method for adaptive LDA model selection. *Neurocomputing*, 72(7-9), 1775-1781.

- Deveaud, R., SanJuan, E., & Bellot, P. (2014). Accurate and effective latent concept modeling for ad hoc information retrieval. *Document Numérique, 17*(1), 61-84.
-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suppl 1), 5228-5235.
- Mützel, S. (2015). Facing big data: Making sociology relevant. *Big Data & Society, 2*(2), 2053951715599179.

[참고사이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2021년 6월 20일 검색 및 인출(「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기본법」).

○ — 부 록

부록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

분야 1 일자리 분야 세부과제 현황 (94개)	
세부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고용부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부
5)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7개 과제)	부처합동
6) 청년 체험형 일자리 지원	기재부
7) 국민내일배움카드(그린뉴딜 분야 신규 지정)	고용부
8)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고용부
9)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여가부
10) 청년여성 역량 강화	여가부
1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고용부
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부
13)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산업부
14)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7·9급)	인사처
15) 산업기능요원 신산업분야 편입 확대	병무청
1-2.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3)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산업부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고용부
2)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크레딧)	고용부
3)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구축(K-디지털 플랫폼)	고용부
4)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고용부
5)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식품부
6)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국토부
7) 기업대학	고용부
8)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	고용부
9)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고용부
10) 해외 취업지원	고용부
11)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국토부
12) 기업인력 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중기부
13)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농식품부
14) 국제옵서버 인력 확대	해수부
15) 수산식품 청년마케터 육성	해수부
16) 탈북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17)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산업부
18)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분야 전문교육 제공	방사청
19)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보훈처
20) 청년 증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보훈처
21)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국방부
22) 청년귀농 장기교육	농식품부
23) K-Shield 주니어	과기부
24)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지원	병무청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2-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1)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중기부
2)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3) 예비창업패키지	중기부
4) TIPS(팁스) 프로그램	중기부
5)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중기부
6)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과기부
7)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8)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9) 혁신창업펀드	중기부
10) 재도전 성공 패키지	중기부
11)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국토부
12) 대학창업펀드조성	교육부
13)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부
14)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식품부
15)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농식품부
16)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 강화	조달청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식품부
2)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해수부
3)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중기부
4)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문체부
5) 게임기업 육성 지원	문체부
6)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환경부
7)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문체부
8)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에 희망상가 공급	국토부
9)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매장 활성화	국토부
10)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중기부
11) 청년식품창업Lab 운영	농식품부
12)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농식품부
1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14)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진청

15)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식품부
16)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식품부
17)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농진청
18) 우수벤처기업 공동채용	중기부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3-1.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1)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2)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3)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고용부
3-2. 청년 노동권의 보장	
1)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화	고용부
2) 직장내 성희롱 근절 강화	고용부
3)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고용부
4)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여가부
5) 근로감독 강화	고용부
6)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고용부
7)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4-1.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1) 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	기재부·행안부
2)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추진	권익위
3)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	고용부
4)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 정착 지원	인사처
4-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1) 청년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	고용부
2)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여가부
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고용부
4) 출산·육아 참여권리 보장	고용부

분야 2

주거 분야 세부과제 현황 (24개)

세부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4.3만호 공급	
1)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국토부
2)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국토부
3)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국토부
4)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국토부
5) 청년 특화주택 역세권 리모델링형	국토부
6) 청년 특화주택 기숙사형	국토부
7)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식품부
1-2. 대학기숙사 확충(3만명) 및 기숙사비 경감	
1) 대학기숙사 확충	교육부
2) 대학기숙사비 부담 경감	교육부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1)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부
2-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1)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국토부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부
3)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국토부
4)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개선	국토부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3-1.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황 지원	
1)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토부
2) 고시원 등 거주자 이주 패키지 지원	국토부
3-2.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1) 노후고시원·반지하 주택 등 매입 청년주택 리모델링	국토부
2) 불법 건축물 감독관 운영	국토부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4-1.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1)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 신설·운영	국토부
2) 좋은 청년주택 시범 설치	국토부
4-2.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1) 주거포털 마이홈 개선	국토부
2)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운영	국토부
4-3.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1) 공유주택 펀드 투자	국토부
4-4.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	
1) 도심융합특구 지정	국토부

분야 3

교육 분야 세부과제 현황 (83개)

세부과제명	소관부처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1) 국가장학금	교육부
2) 대학생 근로장학금	교육부
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교육부
4)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농식품부
5) 인문 100년 장학금	교육부
6)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과기부
7)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교육부
8)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교육부
9)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교육부
10) 대학 입학금 폐지	교육부
11) 꿈사다리 장학사업	교육부
1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식품부
1-2. 대학 미진학 청년의 교육비 지원	
1)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교육부
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교육부
1-3.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교육부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2-1. 혁신공유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교육부
2) 3단계 LINC 육성사업 기획 추진	교육부

2-2.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1) 산업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산업부
2)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중기부
3)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	과기부
4)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환경부
5) 미래에너지 인력 양성	산업부
6)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농진청
7) ICT 기반 수산 전문인력 양성	해수부
8)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문체부
9)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10)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문체부
11) 대학연계 미디어 교육	방통위
12)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및 리더양성	특허청
13)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교육부
14) 환경 분야 특성화고 지정·확대	환경부
15) 발명·특허 분야 특성화고 지정·확대	특허청
16)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국토부
17) 글로벌 산학협력 역량 강화	교육부
18)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과기부
19)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과기부
20) SW마에스트로 과정	과기부
21) SW중심대학	과기부
22)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과기부
23)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농진청
24) 산업현장 수요맞춤형 청년 기술인력 양성	고용부

25)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기부
26)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해수부
27)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과기부
28)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과기부
29) 인공지능 핵심고급인재 양성	과기부
3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과기부
31) 차세대 보안 리더	과기부
32)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R&D)	식약처
33)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식약처
3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식약처

3. 교육 - 일자리 연계 강화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1)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교육부
2)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교육부
3) 국민내일배움카드(미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고용부
4) 고졸자 후속 관리 도입	교육부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1) 청년(대학생) 진로 및 정신건강 등 토털케어 지원	교육부
2)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	고용부
3)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교육부
4)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확대	고용부
5)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국방부
6) 취업준비생 및 직업 전환자 지원 강화	교육부
7)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과기부
8) 기업연계 청년 기술전문 인력양성	과기부
9) 일학습 병행제	고용부

10) 농업계 대학지원	농식품부
11) 물류 전문인력(고교, 대학) 양성 지원	국토부
12)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국토부
13)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산림청
14)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중기부
15)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기부
16) 청년 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수부
1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과기부
18)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교육부
19)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과기부
20)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사업	농식품부
3-3.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1) 직업교육 혁신지구 조성	교육부
2)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교육부
3) 마이스터대 도입	교육부
4) 신산업분야 특화선도 전문대학 지원	교육부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1.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1) K-MOOC 2.0 구축	교육부
2) 학교밖 청(소)년 온라인 지원 강화	여가부
4-2.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1) 평생 배움터 구축	교육부
4-3.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1)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지정·운영	교육부

분야 4

복지·문화 분야 세부과제 현황 (37개)

세부과제명	소관부처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	
1) 청년희망계좌(가칭) 통합 및 운영 개선	복지부
2)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국방부
1-2. 청년 부채부담 경감	
1)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	금융위
2. 청년 건강 증진	
2-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마음건강 특화사업)	복지부
2)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마음건강 바우처)	복지부
3)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자살예방)	복지부·여가부
4)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중독예방)	복지부
2-2.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1) 청년 국민건강 검진 무료 실시	복지부
2)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복지부
3)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문체부
4)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국토부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1) 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복지부
2)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복지부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1) 위기 청년 자립 지원	여가부
2)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여가부
3) 이주배경 청년 지원	여가부
4)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여가부

3-3.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1)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교육부
2)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문체부
3-4. 빈곤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대	
1)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4-1.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 혁신을 응원	
1) 청년 콘텐츠기업 모험투자펀드	문체부
2)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및 신기술 게임개발 지원	문체부
3)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문체부
4-2.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1) 청년 사회 첫걸음 문화누리카드	문체부
2) 청춘 마이크 사업	문체부
3) 청년관광 지원	문체부
4) 생활속 문화시설(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소규모창작공간 등) 확대	문체부
5) 청년 삼삼오오 인문실험	문체부
6)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지원	문체부
7)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문체부
8)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체부
9) 프로스포츠 연맹·구단 인턴십 지원	문체부
4-3.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기준 완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	문체부
2)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지원	문체부
3)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문체부
4) 문화 PD 운영	문체부
5) 1인 광고콘텐츠 및 청년창작자 콘텐츠 제작 지원	문체부

분야 5

참여·관리 분야 세부과제 현황 (32개)

세부과제명	소관부처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1-1.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1) 청년참여 20-30	국조실
2) 대학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 청년참여 강화	교육부
3) 주거정책 결정기구 청년참여 확대	국토부
1-2.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1) 청년의제 공론화장 운영	권익위·국조실
2) 청년 거버넌스 확대	국조실
3)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청년제안 및 제도개선 활성화(3개 과제)	권익위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2-1.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1) 청년정책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국조실
2)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국조실
3) 청년 관련 법령 체계화	국조실·법제처
2-2.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1) 자치분권형 청년정책 지원	행안부
2)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마련	국조실
2-3.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1)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국조실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3-1.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1) 온라인 청년센터	고용부
2) 지역별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	행안부
3) 오프라인 청년센터	고용부
3-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1)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	행안부
2) 청년두레 지원	문체부
3)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중기부
4) 청년공동체 활성화	행안부
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문화재청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4-1.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고용부
2)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여가부
3) 청년 금융교육 지원	금융위
4) 대학 인권센터 설치 강화	교육부
5)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공정위
4-2.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1)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	외교부
2) 한반도 평화정착 청년참여 활성화	통일부
3) 글로벌 청년 기후변화 해커톤	환경부
4) 한·아세안 청년 서밋	여가부
5)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	농식품부
6)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부
7)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보훈처

2. 전문가 자문 조사표

1. 청년정책연구 현황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청년'(또는 후기 청소년, 2030, 20대, 성인기 이행 등 유사 키워드)의 키워드로 NKIS(국가정책연구포털), PRISM(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한 범위에 따라 자료의 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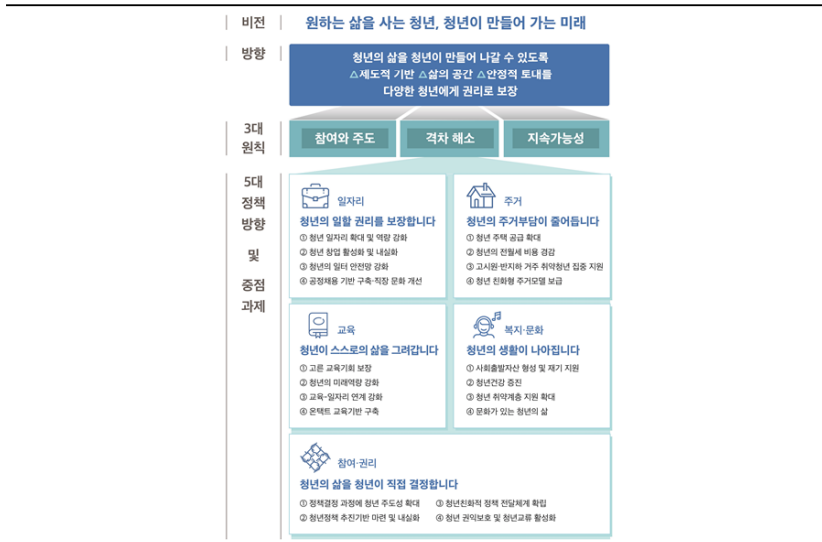
(1)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정책연구
- 연구제목에 '청년'(또는 후기 청소년, 2030, 20대, 성인기 이행 등 유사 키워드)을 포함하는 정책연구
(2)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정책연구
- 다수의 청년이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주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예: 고등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 이행, 저출산 등 이행기 관련 주제)
- 청년층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연구주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예: 노동시장 변화와 실업, 고령화, 고학력화, 일자리창출, 근로 및 복지취약계층)

※이 연구에서는 청년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적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정의함. 개별 연구에 따라 청년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밝히는 것은 이 연구의 관심이 아니므로 개별 연구에서 활용한 청년 키워드 자체에 대한 해석 또는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음.
※정책연구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발주로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의 계약 체결 후 추진되는 사업 등을 포함함.

- 이와 관련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정책의 분야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 구분과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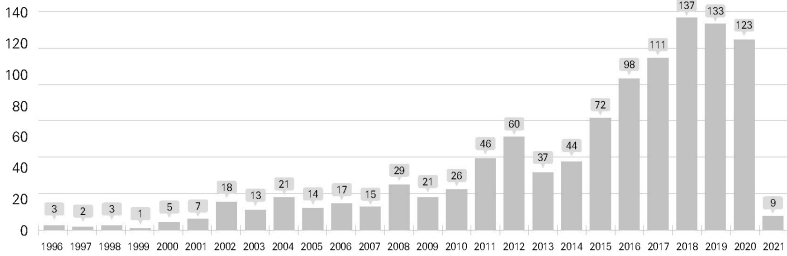
※ (참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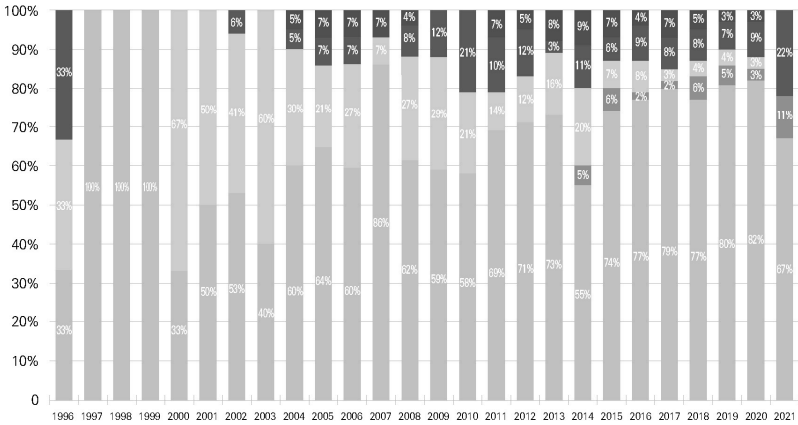
3. 청년정책연구의 연도별 추이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영역별 연구 수행 추이(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등 제외)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2002년 이전과 2021년 현황은 참고만).

연도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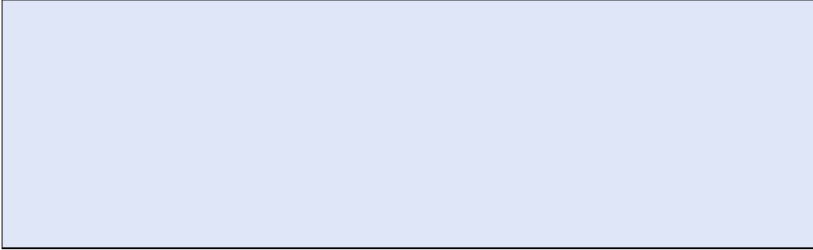
단위 : 천, 연도

연도별 청년정책연구 영역 비중 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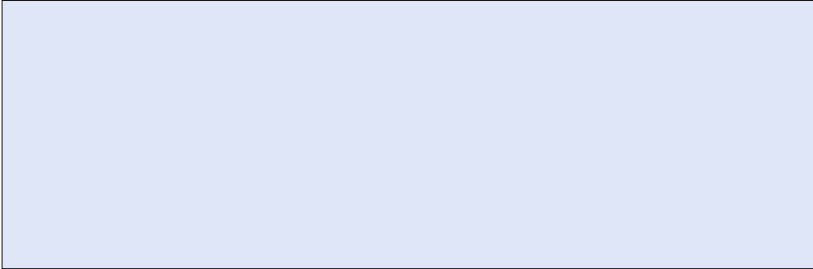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3-1.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연구의 수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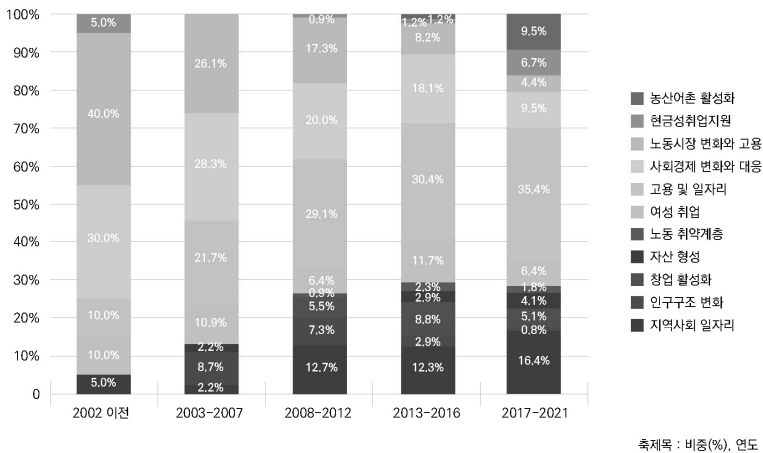
3-2. 초기 일자리 관련 연구와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육 관련 연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됩니다. 대조적으로 주거와 관련한 연구는, 근래 들어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롯해 청년정책연구 내에서의 연구 영역별 비중 변화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4. 다음은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초록 또는 요약 등을 기계학습에 기반한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해 도출한 23개 토픽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영역에 맞추어 분류한 후 각 영역에 해당하는 토픽의 비중변화를 살펴본 것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중 **희망하는 분야를 2개 이상** 선택한 후 해당 영역 청년정책연구 동향에 대한 의견 및 평가 등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토픽명은 연구진이 주요 단어와 해당 연구 내용 등을 검토해 작성한 것임.
- 각 영역별 세부토픽 수는 일자리 11개, 주거 1개, 교육 4개, 복지·문화 4개, 참여·권리 3개이며, 정권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여 세부 토픽별 비중을 도출하였음. 주거 영역은 세부 토픽이 없어 편수 변화만 제시하였음.
- 각 세부토픽이 다루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해당 토픽 주요 단어와 대표 연구제목을 참고하시거나, 연구책임자(_____@nypi.re.kr)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기별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토픽 비중변화



※ (참고) 일자리 분야 세부토픽 별 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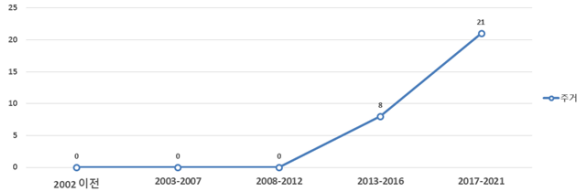
토픽	주요 단어	대표 연구제목
지역사회 일자리	지역, 일자리, 고용, 창출, 산업, 인구, 경제, 제주, 실업, 지원, 현황, 부산, 전국, 경남, 인력	영남권 청년 일자리 현황 및 고용확대 과제
		인천시 관공분야 청년고용 활성화 연구 용역
		경상북도 지방소멸 대응 청년취업 특별방안 연구
		청년친화도시 부산을 위한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방안
		대구경북지역 청년층 고용구조와 일자리 확대 방안
인구구조 변화	기업, 인력, 고용, 채용, 구조, 조직, 감축, 중소기업, 관계, 비중, 근로자, 연령, 임금, 제도, 기관	청년층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구조의 적정성 확보 방안
		청년층 고용정책의 분화 미스매치 해소방안 연구
		공공기관 임원피크제 도입수준과 정책방향
		연령차별 실태 및 해소방안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

도목	주요 단어	대표 연구제목
창업 활성화	기업, 지원, 기술, 활성, 혁신, 생태, 투자, 산업, 벤처, 창출, 기업가, 스타트업, 조성, 분야, 육성	청년 창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방안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청년창업 육성 방안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창업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용역
자산형성	사업, 참여, 통장, 자산, 부채, 지원, 정려금, 효과, 연금, 금융, 저축, 복지, 대출, 지원금, 공제, 유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여성의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2019~202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성과분석 : 1차 인가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효과성 분석 연구 자산형성지원제도 환수해지 원안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보고서 구로공단 노동자의 일과 삶에 관한 연구 -청년직인 산업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 취약계층	노동, 이직,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기간,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행, 미취업, 학업, 근로, 사유, 보호, 노동자	청소년 청년 디지탈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비자발적 이직자의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 2018년 청년사 빅데이터 분석 용역 서비스 소임종의 저임금과 근로조건 조사와 분석 대중 청년층 노동시장 정착과 과정에 관한 장기 추적 연구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략(Ⅱ) : 성별 전문분야 중심으로 청년층의 숙련 불일치와 직업이동 전라북도 청년여성의 취업준비 실태 및 정책 지원 방안 부산지역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청년취업서비스 산출액 영향요인을 위한 청년층 운영사업 성과평가 운영방안 마련 오프라인 청년센터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청년일자리정책 수요자 현상의견 수렴 및 대안 제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2~2010
여성취업	여성, 취업, 고용, 노동, 일자리, 경력, 시장, 졸업, 경험, 직업, 임금, 직장, 대학, 전공, 대졸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1) 노동이해대변의 다양화와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과정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EU의 고용시장 변화와 VET 제도 선진화 전략 IMF 금융지원 이후 실업분체에 관한 정책 대응 -영국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고용변화와 향후 과제 경제위기와 고용
정책 체계 화 내실화	지원, 사업, 운영, 추진, 체계, 평가, 활용, 개선, 대상, 센터, 제도, 지역, 프로그램, 기관, 강화 ※ 이 도목의 경우 분류된 연구의 다수가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다룸에 따라 다른 일자리 세부도목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 일자리 영역으로 분류하였음.	취업률 근속의 규모효과와 이직효과 분석 및 취업률 취업률시생략안 연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효과성) 분석 연구(2017~2019) 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 요구 파악을 위한 FGI 연구 활동지원사업 참여사업 참여자 만족도 연구 -신원성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중심으로 서울형 청년여 지원방안 기초연구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	경제, 변화, 국가, 노동, 한국, 시장, 방향, 기능, 정부, 구조, 제도, 중요, 자원, 산업, 지속	경기도 청년지원금과 근로조건 조사와 분석 청년통장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청년층의 직업이동 청년층의 직업이동 청년층의 직업이동 청년층의 직업이동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고용, 노동, 시장, 실업, 증가, 일자리, 계층, 근로, 소득, 임금, 취약, 취약, 감소, 제도, 변화	청년층 근속의 규모효과와 이직효과 분석 및 취업률 취업률시생략안 연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효과성) 분석 연구(2017~2019) 청년수당 참여자의 정책 요구 파악을 위한 FGI 연구 활동지원사업 참여사업 참여자 만족도 연구 -신원성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중심으로 서울형 청년여 지원방안 기초연구
현금성 취업지원	활동, 참여, 지원, 사업, 구직, 서울, 프로그램, 광주, 경험, 수당, 시간, 지원금, 센터, 심리, 준비	경기도 청년지원금 효과성 연구 청년 농촌보급지원사업 계획 수립 용역 연안형 도시재생 기금수상 -부산 원도심 및 연도지역 사례 분석- 이촌지역 사회경제활성화 장기추진 조사체계 연구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실천농업 운영을 통한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전략
농산어촌 활성화	농업, 농촌, 도시, 어촌, 지역, 귀농, 귀촌, 농산어촌, 인구, 공간, 마을, 사업, 육성, 추진, 분야	

- 일자리 영역을 선택하신 경우 이곳에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① 연구진이 도출한 세부 토픽명의 타당성에 대해 해당 토픽의 주요 단어와 대표 연구제목을 토대로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② 일자리 분야 세부 토픽 동향 분석 결과와 개인 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일자리 분야 연구의 전망 또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③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 수행되어야 할 청년정책연구 과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시기별 주거 분야 청년정책연구 편수



축제목: 보고서 편수, 연도

※ (참고) 주거 분야 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토픽	주요 단어	대표 연구제목
주거	주택, 주거, 임대, 가구, 공유, 자원, 공공, 공급, 거주, 신혼, 부부, 입주, 지역, 대상, 공간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 관리정책 추진방향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개선방안
		경상북도 인구유입을 위한 청년 공유주택 도입 연구
		대전시 청년임대주택 소요 추정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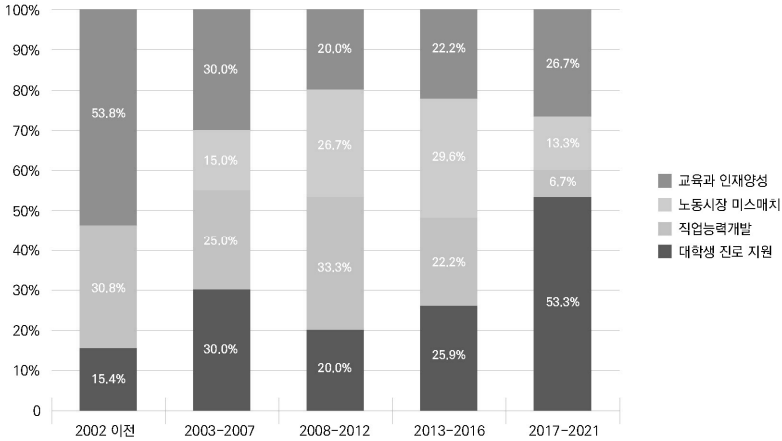
- 주거 영역을 선택하신 경우 이곳에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① 연구진이 도출한 토픽명의 타당성에 대해 주요 단어와 대표 연구제목을 토대로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② 주거 분야 연구 추이와 개인 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분야 연구의 방향성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③ 주거 분야와 관련해 수행되어야 할 청년정책연구 과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기별 교육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토픽 비중변화



축제목 : 비중(%),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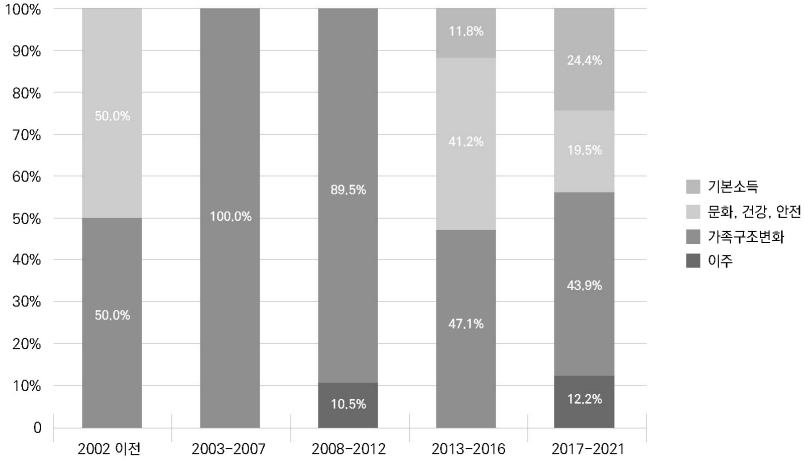
※ (참고) 교육 분야 세부토픽 별 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토픽	대표 연구제목
대학생 진로지원	청소년 역량자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Ⅰ & Ⅱ) : IEA ICSS 2016 - 대한청년 기초통계분석보고서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4)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직업능력 개발	생애능력 함양을 위한 실업교육 체제의 현황과 과제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선방안: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개선방안 연구
노동시장 미스매치	직업능력개발 관련 통계 활용 및 개선 방안
	직업능력개발 우수 훈련기관 연구(1)
	중소기업경력자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촉진 방안 연구용역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의 구조와 성과
교육과 인재양성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산학연계시스템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연구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와 지역대학의 역할
	한국교육의 국제적 좌표와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연구
	인재강국 건설을 위한 교육선진화 개혁방향 연구
	대학일학제도의 운영 실상과 영향 분석 연구
	대학기반 성인여성 인재양성 가능 강화 방안
	미래사회의 교육양식과 평가체제에 관한 연구

- 교육 영역을 선택하신 경우 이곳에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① 연구진이 도출한 세부 토픽명의 타당성에 대해 해당 토픽의 주요 단어와 대표 연구제목을 토대로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② 교육 분야 세부 토픽 동향 분석 결과와 개인 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분야 연구의 방향성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③ 교육 분야와 관련해 수행되어야 할 청년정책연구 과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기별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도입 비중변화



축제목: 비중(%),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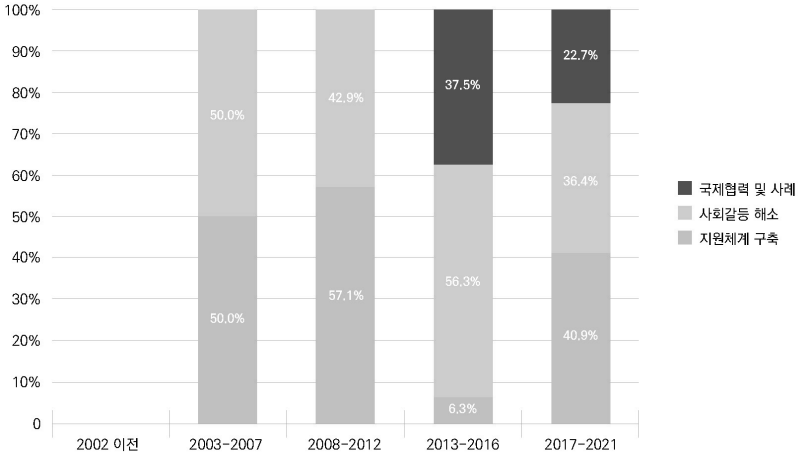
※ (참고) 복지·문화 분야 세부도입 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도입	주요 단어	대표 연구제목
이주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 동포, 이민, 외국인, 한국, 통합, 아동, 재외, 포용, 디아스포라, 배경, 구축, 다문화	글로벌 코리안 인재의 개발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방안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청년 유희인력 해외진출 장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국가발전과 통합 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가족구조변화	가구, 여성, 가족, 출산, 결혼, 자녀, 경제, 지원, 증가, 부모, 연령, 세대, 소득, 남성, 저출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지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제주지역 2030 미혼청년의 결혼·출산의향과 정책 대응방안
		경인도 청년 일 결혼 출산 조사
		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
문화, 건강, 안전	문화, 여성, 공간, 건강, 평등, 활동, 커뮤니티, 지역, 목표, 예술, 분야, 양성, 예술인, 젠더, 영역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2017 서울시민 문화생활 리포트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역량강화 방안
		생애건강지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청년 질병예방 연구용역
기본소득	기본소득, 경기도, 소득, 배당, 효과, 제도, 지역, 도입, 기본, 지급, 보장, 복지, 수급, 경제, 화폐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충남 청년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방향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효과 검증 목표로 청년층 대상 증가기반 과학적 정책실험 설계

- 복지·문화 영역을 선택하신 경우 이곳에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① 연구진이 도출한 세부 토픽명의 타당성에 대해 해당 토픽의 주요 단어와 대표 연구제목을 토대로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② 복지·문화 분야 세부 토픽 동향 분석 결과와 개인 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분야 연구의 방향성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③ 복지·문화 분야와 관련해 수행되어야 할 청년정책연구 과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기별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연구 세부토픽 비중변화



축제목 : 비중(%), 연도

※ (참고) 참여·권리 분야 세부토픽 별 주요 단어 및 대표 연구

토픽	주요 단어	대표 연구제목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복지, 고용, 보장, 연령, 기준, 제도, 공공, 아동, 입법, 지원, 분야, 장애, 비영리, 제공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지원 연구
		사회서비스일자리 연계 활용방안 연구
사회갈등 해소	세대, 갈등, 통합, 국민, 미래, 인식, 정치, 제도, 한국, 경로, 우대, 포용, 문화, 노인, 정보	서울시 세대통합 실태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세대 간 갈등이 유발할 미래위험 관리
		일터양육 인식도 조사도 어려운 시대-2030 청년 회사의 원안과 대안 모색
국제협력 및 사례	과학, 중국, 기술, 협력, 환경, 정부, 기술인, 국가, 한국, 발전, 교육, 운영, 양국, 혁신, 분야	2018년 한중일 환경교육 협력사업 운영 및 사례 연구(2015-2018)
		2014년 환경장관회의 (TEVM) 청년포럼 운영 및 공동 환경교재 개발연구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연구 및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2014)

- 참여·권리 영역을 선택하신 경우 이곳에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① 연구진이 도출한 세부 토픽명의 타당성에 대해 해당 토픽의 주요 단어와 대표 연구제목을 토대로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② 참여·권리 분야 세부 토픽 동향 분석 결과와 개인 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분야 연구의 방향성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③ 참여·권리 분야와 관련해 수행되어야 할 청년정책연구 과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연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비즈니스 와중에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인 쇄 2021년 8월 27일

발 행 2021년 8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라인쇄 전화 044)866-6384 대표 이호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53 Fax. 82-44-415-2349 www.gotoschool.re.kr